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사학위논문

김정은 시기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 대응

A study on North Korea's response to the ROK-US 'decapitation operation' during the Kim Jong-Un era

한 도 형

북한대학원대학교

2024년 6월 일

석사학위논문

김정은 시기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 대응

A study on North Korea's response to the ROK-US 'decapitation operation' during the Kim Jong-Un era

지도교수 김 동 엽

이 논문을 북한학 석사학위(군사안보전공)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6월 일

북한대학원대학교
군 사 안 보 전 공
한 도 형

한도형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2024년 6월 일

감사의 글

비록 내향적인 성격이지만 감사의 글을 통해 몇몇 분들께 작은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담습니다.

‘논문은 가족이 함께 쓰는 것’이라는 말을 어느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작 석사논문’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이 글을 적기까지 걸어온 과정이 조금 험난했던 것 같습니다. 희생인 줄도 모르게 서로 웃고 배려하며 함께 헤쳐온 가족분들에게 많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아버지 존경하고 많이 사랑합니다.

이와 함께 은사이신 김동엽 교수님께도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벽을 마주한 것 같은 막막한 순간들이 주기적으로 찾아왔지만 끊임없는 격려와 지도로 사실상 무지한 어린 아이를 이끌어주셨습니다. 교수님의 격려와 지도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이름 모를 어느 장애물 뒤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공부하며 이따금씩 찾아왔던 기쁘고 즐거웠던 시간들도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감사 드립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더 많은 가족들이 행복하고 평안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도형 드림

목 차

국문요약 ····· v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 목적 ····· 1
제2절 선행연구 검토 ····· 3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6

제2장 '참수작전'과 대응의 이해 ····· 9
제1절 '참수작전' 개념과 사례 ····· 9
1. '참수작전'의 개념과 이론 ····· 9
2. '참수작전'의 사례 ····· 13
제2절 김정은 시기 이전 한미 '참수작전'과 북한의 반응 ····· 16
1. 김정은 시기 이전 한미 '참수작전' ····· 16
2. 김정은 시기 이전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반응 ····· 19
제3절 분석의 틀 ····· 20

제3장 한미 '참수작전'의 등장과 '수세적' 대응 ····· 24
제1절 한미 '작전계획 5015'와 북한의 '수세적' 대응 ····· 24
1. 한미 '작전계획 5015' 발효와 '참수작전'의 노출 ····· 24
2. 북한의 '수세적' 대응의 관성적 유지 ····· 25
제2절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지속과 '수세적' 대응 ····· 29

제4장 한미 ‘참수작전’의 구체화와 ‘공세적’ 전환 ····· 33
제1절 구체화된 한미 ‘참수작전’과 북한의 ‘공세적’ 전환 ····· 33
1. 구체화된 한미 ‘참수작전’ ····· 33
2. 북한의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 ····· 40
제2절 북한 핵무력 완성 선언과 ‘공세적’ 전환 ····· 54

제5장 한미 ‘참수작전’의 노골화와 대응의 제도화 ····· 60
제1절 ‘참수작전’의 공개적 강화와 ‘공세적’ 대응의 제도화 ····· 60
1. 한미 ‘참수작전’의 공개적 강화 실시 ····· 60
2. 제도화된 북한의 ‘공세적’ 대응 ····· 66
제2절 북한 핵무력의 고도화와 제도화된 ‘공세적’ 대응 ····· 72

제6장 결론 ····· 78

참고문헌 ····· 83

부록. 2016년~2017년,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언급 ····· 89

ABSTRACT ····· 93

표 목 차

【표 1-1】 김정은 시기 '참수' 관련 조선중앙통신 기사·사설 현황 ·· 7
【표 2-3】 북한의 세 가지 대응에 대한 이념형적 구분 ····· 21
【표 3-2】 김정은 집권 이후 2016년까지 미사일 발사현황 ····· 31
【표 5-1】 핵무력 정책법, 러시아 핵억제 기본원칙 핵 사용조건 ··· 68

그 림 목 차

【그림 2-1】 존 워든, 5개 전략동심원 모델 ····· 10
【그림 5-1】 북한의 '참수작전' 대응의 변화 ····· 77

국문요약

김정은 시기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 대응

군사·안보전공 한 도 형
지도교수 김 동 엽

본 연구는 ‘참수작전’이 군사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인식, 대응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없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언제,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변화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2015년 6월 한미 ‘참수작전’을 포함한 ‘작전계획 5015’가 발효되고, 2015년 8월 한국 군 관계자의 ‘참수작전’에 대한 공식 언급 등이 있었다. 다만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초기 대응은 민족, 동족, 겨레, 통일 등 남북 공통의 가치를 강조하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거론하기보다는 도덕적 비판을 가하고 대화와 협력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수세적’ 대응에 머물렀다. 이는 2013년 2월 제정한 ‘핵보유법’에서 밝힌 억제·보복을 위한 핵무기 보유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관성적인 대응이었다. 이 시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북한은 기존 무기체계의 실전 능력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였다.

이듬해 북한은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2016년 2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에서 ‘참수작전’에 대해 선제공격으로 응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제기했고, 이어 3월 7일 국방위 성명에서

는 ‘핵 선제공격’으로 응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이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한 시기는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였다.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진행한 데 이어 같은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이듬해인 2017년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북한이 2년간 3번의 핵 실험을 진행한 것은 2016년~2017년 시기가 유일하다.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를 보유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고, 고체추진제 기반 미사일도 잇달아 공개하는 등 미사일 역량에 있어서도 진일보하였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낸 것은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인 신뢰성을 부여하였다.

북한은 바이든 미국 정부, 윤석열 한국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참수작전’ 능력 구축과 시현이 한미연합훈련 등을 통해 다시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며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제도화하였다. 1년 후인 2023년 9월에는 핵무력정책법을 헌법에 명시하며, 제도화로 이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나아갔다. 북한이 2016년 3월 《정부,정당, 단체 연합성명》에 담은, 북한의 ‘최고존엄’이 위협 당할 시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제소멸하도록 국법에 규정되었다는 주장이, 약 6년 후에야 실현된 것이며, 긴 시간의 배경에는 핵·미사일 고도화가 있었다. 북한은 ‘공세적’ 대응을 제도화한 시기 다양한 전술핵 타격훈련을 실시하며 한국을 군사적 타겟으로 한다는 입장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미동맹 중 일단 한국에 대해서라면 ‘핵 인질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기인하며 배경에는 핵·미사일 고도화가 있다. 북한이 추구하는 ‘한국인 핵 인질화’ 여러 목표 중 하나에는 한미 ‘참수작전’, ‘김정은 제거작전’에 대한 억제적 성격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주제어: 북한, 김정은, 작전계획5015, 참수작전, 선제공격, 핵무력정책법, 핵무력, 핵 인질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살펴보고 그 배경에 어떠한 요인이 작용했는지 연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참수작전'이 군사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독립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없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언제,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변화의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지, 북한이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이해하고자 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민주주의 국가들의 전쟁에 대한 새로운 경향으로 인해 현대전은 비용,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적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참수작전'은 매력적인 작전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미국은 정밀성 등이 향상된 무기체계를 통해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이슬람국가(IS) 수장 아부 바르크 알바그다디.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Quds)군 사령관 가셈 술레이마니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참수작전'을 성공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한국과 미국 역시 북한의 지도부를 목표로 하는 '참수작전'을 2015년 '작전계획 5015'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한미는 각각 '참수작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특수부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해당 부대들은 연합훈련 등을 통해 공식·비공식적으로 숙달 훈련을 진행해오고 있다. 최고지도자,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유일지도체계가 확립된 북한은 한미의 '참수작전' 관련 움직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다양한 대응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북한이 처음으로 '참수작전'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은 언

제인지, 한미의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그리고 변화를 발생시킨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이 같은 질문의 답을 모색해 가는 과정을 통해 한미 ‘참수작전’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북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한미 ‘참수작전’과 관련한 북한의 움직임을 예측하거나, 한미 ‘참수작전’ 운용과 관련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동안 한국 내 북한학, 군사학에서 ‘참수작전’에 대한 이해와 설명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참수작전’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피거나, 어떻게 하면 ‘참수작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지 논하는 등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한국이나 한미의 입장에서의 접근이 대부분이었다. ‘참수작전’의 대상이자 목표인 북한에 대해서는 ‘참수작전’과 관련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수준 정도로 생각하고 받아들였을 뿐, 북한이 정말로 ‘참수작전’을 위협적으로 느끼는지, 북한은 한미의 ‘참수작전’ 관련 움직임에 대해 어떠한 대응을 해왔는지, 이러한 대응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변화가 있었다면 변화에 영향을 미친 배경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과 관련해, 체계적인 분석을 시도한 최초의 연구다. 본 연구는 2015년 한미 ‘작전계획 5015’ 발효를 통해 전면에 등장한 한미 ‘참수작전’과 관련, 북한 매체의 기사 및 사설, 법·제도화 진행과정,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의 발언 및 행보 등을 종합하면,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북한 대응의 전반적인 변화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본 연구는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수세적’인 수준에서 시작해 점차 ‘공세적’으로 변화하고 마침내 ‘제도화’로 나아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 변화에 영향을 미친 주요 배경에 무엇이 있을지 탐색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구체적 근거를 통해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 변화를 설명함과 동시에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이러한 북한의 대응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대응을 '공세적'으로 바꾸고 '제도화'까지 나아가도록 하는데 있어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설명하고자 하였다.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참수작전'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 RISS를 활용해 검색해본 결과 국내 학술논문 15건, 학위논문 15건, 단행본 32건이 도출됐다. 이중 본 연구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연구는 국내 학술논문 9건, 학위논문 9건, 단행본 4건으로 검색됐다. '참수작전'이 군사 작전에서 갖는 중요성에 비하면, 북한학·군사학에서 제기된 논문의 절대 수량은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었다.

이중 가장 많은 연구가 북한 위협에 대한 한미 대응방안 중 하나로 '참수작전'을 제시하는 연구였다. 국내 학술논문 3건, 학위논문 7건이 여기에 해당됐다. 먼저 학술논문을 살펴보면 박창권·권태영(2007)은 한국이 구상할 수 있는 비대칭 전략 중 하나로 '참수작전'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과거 이라크전에서 지휘부 통제가 상실될 경우 군의 전투의지가 빠르게 약해졌다며, 북한 지도부와 국민들을 분리한 후 지도부에 대한 정밀공격을 대안 중 하나로 고려할 것으로 제언하였다.[1] 박휘락(2016)은 한국이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 의지를 나타낼 경우, 최소억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 박휘락(2019)은 또 "핵보유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표적이 있다면, 그 표적을 공격하겠다는 비핵국가의 엄포는 가능할 수도 있다."며, 북한과 같은 권위주의 체

1) 박창권, 권태영, "우리 군의 비대칭전략 : 대안과 선택방향," 『전략연구』, 제39호(2007), pp. 81-118.

2) 박휘락, "북한 핵위협 대응에 관한 한미연합군사력의 역할 분담," 『평화연구』, 제24권 제1호(2016), pp. 81-116.

제에는 ‘참수작전’이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3)]

학위논문에서는 탁경훈(2021), 최재경(2017), 이승수(2014), 인주영(2015), 이일우(2017), 신인균(2013), 김영준(2021)이 한국군의 추진방안 중 하나로 ‘참수작전’을 제시하였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최재경(2017)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임박 시 선제타격 전략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징후가 식별됐을 경우에는 ‘참수작전’ 등 공세적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최재경은 ‘참수작전’의 공개만으로 북한 지도부의 공포심을 증대하고 운신의 제약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다.[4)] 이승수(2014)는 공세적 방위전략이 북한 위협에 대한 취약함을 줄이고 전시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게 한다며 다양한 대안 중 하나로 ‘참수작전’을 제시하였다. 이승수는 남북한의 경우 같은 민족 간 분쟁이라는 특징이 있어, 북한 지휘부 무력화 시 북한 군의 전투의지 상실 현상이 이라크전 등 ‘참수작전’이 적용된 다른 사례에서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5)] 인주영(2015) 역시 ‘참수작전’은 북한 정권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전쟁 억제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고, 한국은 향후 정밀유도무기 등을 확보해 ‘참수작전’을 실행할 능력이 크게 발전될 것이라고 밝혔다.[6)] 이일우(2017)는 주체사상으로 연결된 북한이라는 유기체 중 수령은 뇌수에 해당한다며 유사시 한국은 최우선적으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해 북한의 전쟁 의지를 없애는 전략적 마비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7)] 신인균(2013)은 북한의 핵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 중 하

---

3) 박휘락, “북핵 대응에 대한 한국의 비핵 플랜B 검토,”『의정연구』, 제25권 제3호(2019), pp. 70-96.

4) 최재경, “북한군의 비대칭 전력 위협과 한국군 대응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평화안보·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6).

5) 이승수, “북한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3).

6) 인주영,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5).

7) 이일우, “김정은 시기 북한 군사력 증강 분석과 한국의 대응 전략,”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6).

나로 ‘참수작전’을 제시하였다. 신인균은 한국은 북한에 대해 치명적 보복을 가할 능력이 없다며, 북한이 가장 중시하는 북한 지도부에 대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8] 김영준(2021)은 한국의 ‘참수작전’이 북한 지도부의 오판을 막고 전쟁을 억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합동특수작전능력, 전용 항공자산, 정보・감시능력과 정밀타격능력, 특수작전부대의 작전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9]

그 다음 많은 유형을 차지한 연구는 ‘참수작전’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어떻게 실효성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연구였다. 양욱(2016)은 독재정치, 전제군주정 특성을 지닌 북한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유사시 최고지도자와 전략군사령관을 ‘참수작전’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욱은 유사시 ‘참수작전’을 현실화하기 위해 대통령을 비롯해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지닐 것, 합동특수작전능력 등 전문적 작전능력을 보유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10] 박영태(2016)는 전시가 아닌 평시에는 지도자 뿐만 아니라 핵심시설도 거의 동일한 전략 가치를 갖는다며, 북한의 핵심시설, ‘핵 개발시설’에 대한 참수를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영태는 ‘핵 개발시설’을 ‘참수작전’ 대상으로 삼을 경우 탐지・추적의 용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며 북한의 보복 명분 약화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11]

그밖에 북한이라는 구체적 대상 설정과 관계없이 ‘참수작전’ 관련한 학술논문이 3건 있었다.[12] 그 외 나머지 연구 3건은 주제가 독특해 유형화되기 어려운

---

8) 신인균, “북한 핵개발의 성격 규명과 군사적 대응의 적실성,”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13).

9) 김영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 특수작전부대의 역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21).

10) 양욱, “한국군의 대북참수작전 수행방안.”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6).

11) 박영태, “평시 참수전략의 성공조건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6).

12) 양욱, “참수작전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한국국가전략』, 제5권 제2호(2020) pp. 183-215; 강창부, “참수작전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과 그 시사점,”『세종연구소』, 제26권 제3호(2020), pp. 5-32; 황원준,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표적사살의 정당성,”『한국군사

연구들이었다.[13]

이상 기존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본 연구는 단순히 북한이 '참수작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기존 통념의 수준을 넘어 구체적으로 북한이 '참수작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북한의 '참수작전'에 대한 대응이 시기별로 나뉠 수 있는지, 그 대응들은 수세적·공세적 등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지,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바뀌는 데에는 어떤 맥락이 자리하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본 연구가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인식·대응 연구에 있어 물꼬를 트고,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제3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논문은 연구범위를 김정은 집권 시기로 한정한다. 즉 연구의 범위는 김정은 총비서가 집권한 2011년부터 논문이 작성된 2023년 12월까지이다. 한미 '참수작전'이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표면화, 구체화되었고, 이에 따라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 또한 김정은 총비서 집권 이후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본 논문의 주된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이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집권한 2011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북한의 국영 뉴스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이 '참수'라는 단어를 포함해 발표한 기사, 사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5년

학논집』, 제79권 제2호(2023), pp. 203-228.

13) 황소희, "북한 지도자 제거 이후 한반도 불안정성 제고 가능성 고찰," 『통일과 평화』, 제10권 제1호(2018), pp. 371-400; 이삼성, "북한 핵문제 평화적 해결의 방향," 『JPI정책포럼』, 제12권(2017), pp. 19-51; 이준상, "죽고 사는 김정은 경호," 『北韓』, 제540권(2016), pp. 72-77.

부터 2023년까지 ‘참수’ 관련한 조선중앙통신 기사 및 사설 464개가 포함된다. 연 기준으로 2015년 2개, 2016년 242개, 2017년 201개, 2018년 7개, 2020년 1개, 2022년 2개, 2023년 9개이며, <표 1>은 ‘참수’ 관련 조선중앙통신의 기사 및 사설 현황이다. 2015년 이전 ‘참수’ 관련 북한 매체들의 기사 및 사설은 없었다.

【표 1-1】 김정은 시기 ‘참수’ 관련 조선중앙통신 기사·사설 현황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조중통	없음	없음	없음	2	242	201	7	없음	1	없음	2	9

* 출처: 조선중앙통신을 참조해 연구자가 직접 작성.

북한 매체가 발표한 글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되 북한의 입장이 늘 북한 입장을 있는 그대로 대변하는 것은 아닐 가능성 등이 있는 바, 2차 자료로 언론기사 등을 통해서 확인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반응, 북한의 ‘참수작전’ 해킹 사례, 한국 국정원 보고 등을 함께 확인하였다. 여기에는 내용 중 단어 ‘참수’를 포함하는 2023년 12월까지 한국 언론 기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포함하였다.

주요 논점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집권 이후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인식·대응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언제, 또 어떻게, ‘수세적’인 대응에서 ‘공세적’인 대응으로 넘어갔냐는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의 ‘공세적’ 대응이 점차 제도화되는 모습도 확인하고자 한다. 분석·해석에는 질적 연구방법론을 주로 사용할 것이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하였다. 제2장에서는 ‘참수작전’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함께 김정은 시기 이전 한미 ‘참수작전’의 역량 구현 시도 여부, 이와 관련한 북한의 대응 등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본론에 해당하는 제3, 4, 5장에서는

본 연구의 범위인 김정은 시기, 한미 '참수작전'과 북한의 대응에 따라 세 개의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 변화를 핵무력 수준과 연결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제2장 '참수작전'과 대응의 이해

제1절 '참수작전' 개념과 사례

1. '참수작전'의 개념과 이론

참수(decapitation)는 '뱀의 머리를 가격한다'는 뜻이다. 양욱(2020)에 따르면 '참수작전'은 적의 뇌에 해당하는 수뇌부만을 타격해 몸통 전체에 해당하는 적 군대를 마비시키는 것이다.[14] '참수작전'은 적의 병력, 장비, 시설 섬멸과 무력화를 목표로 하는 공세작전과 다르며, 군사력을 동원해 수행하는 군사작전이라는 점에서 개인 간 불법적 암살(Assassination)과도 다르다. '참수작전'은 때로 표적살해와도 혼동되지만 둘은 성격이 다르다. Antulio Echevarria(2018)에 따르면, 표적살해(Target killing)는 적의 조직을 격멸할 목적으로 실시되며, 적의 지도부에 초점을 두고 진행한다기보다는 적의 조직원들을 체계적으로 제거해나가는 데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다.[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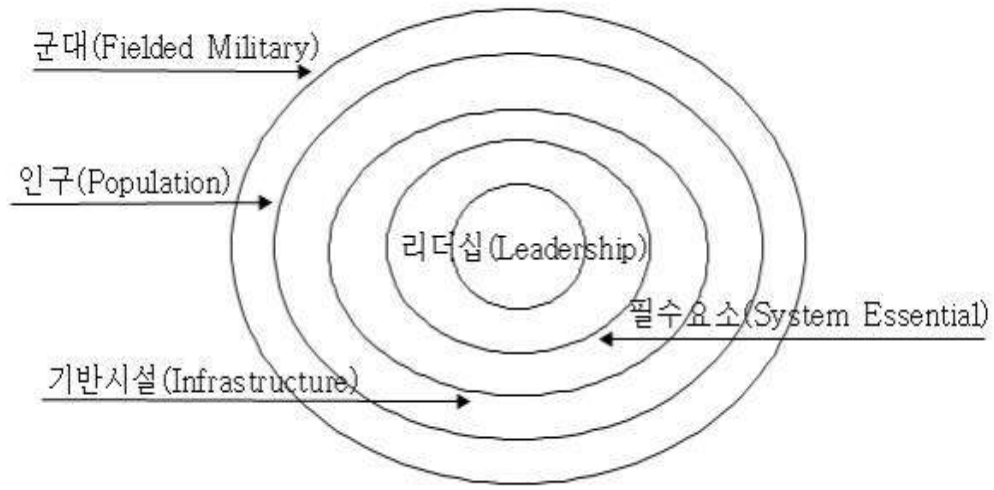
적 수뇌부 타격, 적 지휘부 제거는 오랫동안 전쟁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기 때문에 현대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다만 참수가 현대에 본격 등장한 것은 정보, 정찰, 감시 능력과 무기체계 역량이 향상되면서부터다.[16] 가령 21세기 들어서는 드론(drone) 관련 기술이 발전했으며, 드론을 활용한 '참수작전' 실행 횟수가 증가하였다.[17]

미국 공군의 John Warden(1989)은 5개 전략동심원 모델(The Five-ring model)

14) 양욱, "참수작전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p. 5.
15) Antulio Echevarria. 나종남 역, 『군사전략 입문』(서울: 황금알, 2018), pp 155-156.
16) 위의 글, p. 6.
17) 위의 책, p. 157.

을 제시하면서 부수적 피해 발생 없이 정밀 공중타격만으로 적의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18] 5개 전략동심원 모델에 따르면 국가는 1. 주요 지도자(적의 리더십), 2. 에너지, 식량 등 체계 유지에 필수적 요소, 3. 교통, 공장, 통신 등 사회기반 시설, 4. 인구, 5. 군대 등 다섯 개 상호연결된 요소(원)로 구성된 시스템이다. 또한 공군의 군사작전 목표는 각 요소(원) 내부의 결정적 지점을 식별, 공격하는 것이다. 가장 안쪽에 있는 요소(원)인 리더십의 결정적 지점을 향한 공격에는 적의 지도자 공격, 즉 참수가 포함되어 있다. John Warden은 5개의 동심원에서 중심에 가까울수록 군사적 중요성이 높다고 봤다. 즉 리더십, 지휘부 타격이 최우선적 전략 표적이 된다.

【그림 2-1】 존 워든, 5개 전략동심원 모델



* 출처: John Warden, "Air Theor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Battlefield of the Future* (Alabama: Air University Press, 1995), p. 108.

18) John Warden, *The Air Campaign : Planing for Combat.* (Washington: NDU Press, 1989), p. 108.

‘참수작전’의 정의에 대해서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는 않는다. ‘참수작전’이 적의 지도자를 살해하는 작전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참수작전’이 반드시 적의 지도자 암살, 지도자 살해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다. Audrey Cronin(2006)은 암살, 체포를 통해 적 지도자의 지도자, 작전 지도자를 제거하는 것이 ‘참수작전’이라고 제시하였다.[19] Antulio Echevarria(2018)에 따르면, 참수의 의미에는 적의 지도자를 살해하는 것 외, 적의 지도자를 보다 상대하기 쉬운 지도자로 교체하는 것도 포함된다.[20] Robert Pape(1996)에 따르면, ‘참수’는 리더십 참수, 정치적 참수, 군사적 참수로 구분 가능하다.[21] 여기에서 리더십 참수(Leadership decapitation)란 전쟁을 움직이는 특정 인물을 제거하면 평화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며, 정치적 참수(Political decapitation)란 목표 국가 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권 전복을 시도하는 것, 군사적 참수(Military decapitation)란 목표 국가의 지휘통제 네트워크를 공격해 중앙집권적 리더십을 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다. 이중 리더십 참수는 왕정, 독재정과 같이 결정권한이 특정인(Strategic Individual)에게 집중된 적을 대상으로 진행할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Stephanie Carvin(2012)의 ‘참수작전’ 정의는 보다 협소한데 그는 한 개인이 테러에 가담한 것으로 인식돼 진행되는 계획적인 살인이라고 바라봤다.[22]

‘참수작전’은 전쟁에 대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새로운 경향과도 관련이 있다. 양욱(2020)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까지 전쟁은 국가 주도의 총력적 양상으로 진행됐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과 전사자가 민주주의 국가 사이에서 문제가 되며 탈총력전의 양상이 새롭게 떠오르기 시작하였다.[23] 국지전을

---

19) Audrey Cronin, “How Al-Qaida Ends: The Decline and Demise of Terrorist Groups,” *International Security*, Vol.31, No.1 (2006), p. 16.

20) Antulio Echevarria, 『군사전략 입문』, p. 155.

21) Robert Pape, *Bombing To Win: Air Power and Coersion in War,*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p. 80.

22) Stephanie Carvin, “The Trouble with Targeted Killing,” *Security Studies*, Vol.21, No.3(2012), p. 531.

23) 양욱, “참수작전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p. 14.

제한적으로 진행하며 평화 유지를 도모하는 경향이 엿보인다는 것이다. 한용섭(2003)에 따르면. 현대전은 인명살상,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왔다. 한용섭은 미국이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1991년 걸프전, 1999년 코소보전, 2001년 아프간전, 2003년 이라크전 등 네 차례 대규모 전쟁을 치렀는데, 적의 지휘통제정보체계(C4I)를 무력화시키며 전략적 마비를 달성하고 적 지도부를 제거 혹은 교체하는 방향으로 전쟁을 진행했다고 분석하였다. 또 과거 과도한 전진언제전략을 채택한 데에서 벗어나 정밀성이 향상된 무기체계, 첨단화된 작은 규모의 군사력으로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하였다.[24] 양욱은 새로운 경향 속에서 비교적 적은 희생과 비용을 요구하며 적의 중심을 무너뜨릴 수 있는 '참수작전'이 매력적인 작전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25]

'참수작전'과 관련해 진행되는 논쟁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참수작전'의 효과성에 대한 논쟁이다. 가령 '참수작전'의 효과성에 대해서 Patrick Johnston(2012)은 적 지도자의 성공적인 제거가 전쟁 종식과 승리 가능성을 높이고 적의 군사적 저항, 공격빈도를 낮춘다고 분석하였다.[26] Bryan Price(2012) 연구에 따르면 '참수작전'에 의해 지도자가 참수된 테러단체의 생존율은 다른 테러단체의 생존율에 비해 낮았다. 지도자가 사망한 테러단체 중 약 30%는 2년을 지속하지 못하였다.[27] 다만 Robert Pape(2003)는 자살테러 연구를 통해 약 20년간 진행된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의 테러단체 지도자 참수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일시적으로는 테러단체를 교란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인 성과는 미미했다는 것이다.[28] Jenna Jordan(2014)은 테러단체 연구를 통해 '참수작전'이

---

24) 한용섭, "기획논문: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안보;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군사전략의 변화: 평가와 전망," p. 10.

25) 양욱, "참수작전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p. 16.

26) Patrick Johnston, "Does decapitation work?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leadership targeting in counterinsurgency campaigns," *International Security*, Vol.36, No.4(2012), pp. 47-49.

27) Bryan Price, "Targeting top terrorists: How leadership decapitation contributes to counterterrorism," *International Security*, Vol.36, No.4(2012), pp. 9-46.

역효과를 낳았다고 분석하였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고도로 관료화가 진행됐거나 공동체가 높은 지지를 보낼 경우 테러단체는 '참수작전'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참수작전'은 오히려 테러단체의 응집력을 높이고 대담하게 할 수 있다.[29] Michael Freeman(2010)은 관례화, 관료화, 분권화 등 제도화된 적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은 성공할 확률이 낮다고 밝혔다.[30]

2. '참수작전'의 사례

대외에 잘 알려진 '참수작전' 시도·성공 사례는 다음과 같다. 1992년 '빛나는 길'(Sendrero Luminoso, the Shining Path)이라고 불리는 페루의 테러리스트 조직은 지도자인 아비밀 구즈만(Abimeal Guzman)을 비롯한 주요 지도자들이 페루 경찰에 의해 체포되자 이후 조직 활동이 급격히 축소됐다. 이 사례는 '참수작전' 이후 테러단체가 소멸해가는 경우에 포함된다.

1989년 12월 미국은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Manuel Noriega)를 겨냥한 '참수작전', '대의명분'(Just Cause)을 폈다. 미국은 1989년 파나마를 침공, 마누엘 노리에가를 권좌에서 축출하였다. 미국으로 압송된 마누엘 노리에가는 마약거래 등 혐의가 인정되며 미국 마이애미 연방 교도소에서 2010년까지 17년 복역하였다. 파나마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 '참수작전'은 지도자 살해가 아닌 지도자 교체에 목적을 둔 사례였다.

2002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테러조직인 하마스의 지도자 살레 세하데(Saleh Shehadeh)를 살해하였다.

---

28) Robert Pape, "The Strategic Logic of Suicide Terrorism," *American Political Scienc Review*, Vol.97, No.3(2003), p. 356.

29) Jenna Jordan, "Attacking the leader, missing the mark: Why terrorist groups survive decapitation strikes," *International Security*, Vol.38, No.4(2014), pp. 7-38.

30) Michael Freeman, *The Headless Horseman: A Theoretical and Strategic Assessment of Leadership Targeting*, (California: Naval Postgraduate School, 2010), p. 13.

2003년 5월 1일 미국은 이라크전 종전을 선언했지만 사담 후세인 일가에 대한 작전은 지속하였다. 7월 22일 미국은 모술 외곽 저택에 은신 중이던 사담 후세인의 두 아들인 우다이 후세인, 쿠사이 후세인을 사살하였다. 12월 13일 미국은 '붉은 여명 작전'(Red Dawn)을 통해 티크리트 인근 지역에서 후세인 생포에 성공하였다. 사담 후세인은 2005년 시아파 마을 학살 주도 혐의 등으로 이라크 특별법원에 기소됐고 그해 12월 교수형에 처해졌다.

2006년 6월 7일 미국은 바그다드 인근 마을에서 오사마 빈 라덴과 연계해 테러조직 '알카에다 이라크지부'(AQI)를 만든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를 제거하였다. 작전에는 미국 공군 F-16C 전투기, GBU-12 정밀 유도폭탄, GBU-38 JDAM 합동직격탄 등이 동원됐다.

2010년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테러조직인 하마스의 지도자 마호무드 알 마호우(Mahmoud al-Mabhouh)를 살해하였다.

2011년 3월 20일 미국은 리비아의 카다피 정권이 반정부 민주화시위를 무력으로 유혈 진압하자 유엔 평화유지군 작전 중 하나로 '오디세이 새벽 작전'(Operation Odyssey Dawn)을 진행하였다. 작전에는 항공기를 동원한 카다피 호위차량 공습이 포함됐고 MQ-1 프레데터 무인 공격기 등이 투입됐다.

2002년 9.11 테러 이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즉각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테러 해부자로 지목된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거나 체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약 10년 후인 2011년 5월 1일 미국은 '넵튠 스피어 작전'(Operation Neptune Spear)을 통해('제로니모 작전'(Operation Geronimo)이라고도 불린다) 파키스탄 아보타바드(Abbottabad) 인근 주택에 숨어지내던 빈 라덴 사살에 성공하였다. '참수작전' 실행 전 첩보위성, RQ-170 스텔스 무인정찰기 등이 주택을 집중 감시했으며 '참수작전'에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Navy SEAL) 6팀, 일명 데브그루(DEVGRU) 등이 동원됐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작전 상황을 생중계로 시청하였다.

2017년 2월 미국은 시리아 이들립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알 카에다의 2인자 아부 알 카이르 알마스리를 제거하였다. '참수작전'에는 일명 '닌자 폭탄(Ninja

bomb)'이라고 불리는 '헬파이어 R9X 미사일'이 사용됐다.

2019년 1월 미국은 예멘에서 자말 알-바다위를 제거하였다. 작전에는 '헬파이어 R9X 미사일'이 사용됐다.

2019년 10월 26일 미국은 '케일라 뮬러'(Kayla Mueller) 작전을 통해 시리아 이들리브 은신처에 숨어있던 이슬람국가(IS) 수장 아부 바르크 알바그다디를 사살하였다. '참수작전'에는 미 특수부대 델타포스 등이 동원됐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상황실에서 작전 상황을 생중계로 시청하였다.

2020년 1월 3일 미국은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Quds)군 사령관 가셈 술레이마니 장군을 제거하였다. '참수작전'에는 공군 드론(무인기)인 MQ-9 리퍼(MQ-9 Reaper)가 투입, '헬파이어 R9X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2020년 6월 14일 미국은 시리아 이들립에서 알 카에다의 시리아 지부를 이끄는 칼레드 알-아루리를 제거하였다. 작전에는 '헬파이어 R9X 미사일'이 사용됐다. 2023년 7월 7일 미국은 시리아 알 밥 지역을 공습해 시리아 동부지역 이슬람국가(IS) 지도자인 우사마 알 무하지르를 제거하였다. 작전에는 공군 드론(무인기)인 MQ-9 리퍼 3대가 동원됐다.

이상의 '참수작전' 사례는 정보, 정찰, 감시 능력의 발달, 정밀타격능력의 발달 등 무기체계 역량의 발달이 당초 고난도의 '참수작전'을 어떻게 실현 가능한 군사적 옵션으로 만들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특히 2000년 이후 미국의 '참수작전'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이상의 '참수작전' 사례는 전면전에 비해 사상자 등 비용을 최소화한 상태로 군사적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주었고, 미국 등의 국가가 '참수작전'을 주요 군사적 옵션 중 하나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하는 근거가 되었다.

제2절 김정은 시기 이전 한미 '참수작전'과 북한의 반응

1. 김정은 시기 이전 한미 '참수작전'

김정은 집권 시기 이전, 한미 '참수작전'이 외부에 명시적으로 공개된 적은 거의 없다. 한미 작전계획(OPLAN) 가운데 가장 먼저 수립된 것은 '작계 5027'이다.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은 1974년 작성돼, 이후 1~2년마다 보완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27'은 미군의 신속억제전력 배치, 북한전략목표 파괴, 대규모 상륙작전, 점령지 군사통제 확립, 한국 정부 주도 아래 한반도 통일 등 5단계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계 5027' 중 '참수작전'과 관련해서는 1998년 북한 전쟁 기도가 포착될 시 '주요 군사목표'를 선제타격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2002년에는 김정일 '참수작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서 공식 확인한 사실은 없다.[31] 2005년 10월 10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3년 12월 한미 국방부가 북한 정권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작계 5027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했을 때,[32] 한국 국방부는 당일 "대북 선제공격과 관련한 어떤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하면서도, '북한 정권 제거', '참수작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33]

'개념계획 5029'은 북한의 급변사태, 돌발사태를 가정해 수립된 한미의 대비계획이다. 개념계획(CONPLAN)이란 한미의 공동 대응 계획을 다루지만 병력

---

31) "[김정일 사망]北돌발사태 대비 '작계 5029'란?," 『뉴시스』, 2011년 12월 20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04250940?sid=100(검색일: 2024년 1월 20일).

32) "한·미, 한반도서 전면전 발발시 北정권 제거 작전계획 세웠다," 『국민일보』, 2005년 10월 10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0221445?sid=100(검색일: 2024년 1월 20일).

33) "국방부 "어떠한 대북선제공격 계획도 없어"," 『연합뉴스』, 2005년 10월 10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1118812?sid=100(검색일: 2024년 1월 20일).

동원, 작전부대 배치 등 구체적인 군사력 운용계획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작전계획'으로 발전되기 이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개념계획 5029'는 2004년 미국 주도로 추진됐고, 2005년 노무현 한국 정부에서 주권침해 등의 문제를 제기해 '작전계획화' 논의가 중단됐다가, 2008년 이명박 한국 출범 이후 '작전계획화'가 재추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념계획 5029'가 '작전계획 5029'로 전환됐다는 기사, '작전계획 5029'로 '사실상' 전환됐다는 기사가 2005년 이후 일부 나오기도 했지만,[34] 2013년 12월 기사에 따르면, 한국 군 관계자는 '개념계획 5029'는 여전히 '개념계획' 수준에 머무는 상태라고 답하였다.[35]

'개념계획 5029'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서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북한 주민의 대규모 탈북사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북한에서의 정권교체와 쿠데타 등 내전 등 5~6개 유형을 정리해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 특수부대가 북한에 진입해, 핵·생화학무기 등을 제거하고 지역을 안정화시킨다는 것이다.[36] 다만 '개념계획 5029'에 '참수작전'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외부에 알려진 바는 없다. '개념계획 5029'에 '참수작전' 내용이 일부 포함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념계획'에는 구체적인 군사력 운용계획이 담기지 않는다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이를 통해 '참수작전' 관련 실질적 역량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밖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군사작전 개념 중 '작전계획 5030'이 있다. 이는 2003년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장관 지시에 따라 토머스 파고 태평양 사령관, 미 국방부 작전 담당관 등에 의해 초안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

---

34) "한.미, 北급변사태 대비 작전계획 완성," 『연합뉴스』, 2009년 11월 1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950763?sid=100(검색일: 2024년 1월 20일).

35) "北급변사태 대비용 '개념계획 5029' 손본다," 『세계일보』, 2013년 12월 15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131215002634?OutUrl=naver(검색일: 2024년 1월 20일).

36) "이른 전작권환수에 세운 작전계획 5029?," 『아시아경제』, 2009년 11월 2일; https://m.asiae.co.kr/article/2009110211104218965(검색일: 2024년 1월 20일).

은 북한의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군부의 동요를 유도해, 김정일 정권이 붕괴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계획은 '참수작전'의 일반적 정의대로 직접적인 군사적 타격을 통해 북한 지도부 붕괴, 제거를 노린다기보다는, 사전예고없이 정찰기를 북한 영공에 근접비행하거나 군사훈련을 반복 실시해, 북한의 비축자원을 고갈시키는 등 간접적으로 붕괴 환경을 조성하는 안들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37] '북한 고사작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계획 초안이 이후 정식으로 작계 중 하나로 자리잡았는지 여부, 나아가 현재에도 유효한 상태인지 여부 등은 알려진 바가 없다.

김정은 집권 시기 이전 한미의 '참수작전' 내지 '정밀타격작전'은 북한 지도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북한 핵 시설을 목표로 두며 주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2009년 11월 한국 언론 기사에 따르면, '개념계획 5029' 관련해 유사시 대부분의 작전은 한국군이 주도하되, 미군은 핵시설, 핵무기 제거를 담당하기로 한미가 합의하였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한미가 북한 정변사태 발생과 관련해 깊이 우려했던 것은 핵무기, 핵기술의 타국 이전 가능성이었다.[38]

이보다 앞선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외과수술식'(surgical strike) 정밀타격을 구상하고 실행 직전까지 갔던 바 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부설 국가안보문서보관서가 2017년 12월 공개한 미국 정부의 기밀문서에 따르면, 당시 미국 클린턴 정부는 '외과수술식' 정밀타격 이후 전면전이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며 실행까지 단행하지는 않았다.[39] 이 때에도 미국 정부의 초점은 영변 재처리 시설, 원자로 등 북한 핵 시설 파괴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40]

---

37) ""미, 북 붕괴 유도 새 '5030 작전′ 마련중"<美잡지>," 『연합뉴스』, 2003년 7월 14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410637?sid=104(검색일: 2024년 1월 20일).

38) "한.미, 北급변사태 대비 작전계획 완성," 『연합뉴스』, 2009년 11월 1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950763?sid=100(검색일: 2024년 1월 20일).

39) "미국 1994년 북핵때 전쟁 검토…참사우려로 접어," 『연합뉴스TV』, 2017년 12월 10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1OOSV6ZHJI(검색일: 2024년 1월 20일).

과거에도 있었지만 북한 지도부에 대한 한미의 '참수작전'이 정부 관계자, '작전계획' 포함 등을 통해 공식화, 구체화된 시기는 2015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집권 시기 이전, 한미 '참수작전' 관련 내용이 외부에 명시적으로 공개된 적은 거의 없다. 김정은 집권 시기 이전 '참수작전'을 포함한 한미 '정밀타격작전' 관련 논의는 북한 지도부를 목표로 하기보다는 북한 핵 시설을 목표로 두며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2. 김정은 시기 이전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반응

김정은 시기 이전 한미의 '참수작전', 특히 북한 지도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은 공식화,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시기에는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대응을 찾아보기 어렵다.

김정은 시기 이전 북한의 한미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반응은 주로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김동엽(2016)에 따르면 북한은 1970년대 이후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본격화되고 재래식 군사 경쟁력이 약화되자 '피포위 의식(Siege Mentality)'에 근거한 안보 우려를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소련, 동구권 사회주의 붕괴 등으로 인해 북한의 우려는 더욱 깊어졌다. 북한은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난하며 중단을 요구하였다. 북한은 김정일 시기에 들어서는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한미 작전계획을 연결시켜 보다 구체화된 비난을 전개하였다.[41]

북한은 1998년 한미가 새로운 작계 5027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12월 2일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성명은 "미제 침략군의

---

40) "美 1994년 북핵때 전쟁 검토… 90일내 정규군만 54만명 사상 추산,"『서울경제』, 2017년 12월 10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1OOSV6ZHJI(검색일: 2024년 1월 20일).

41) 김동엽,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인식,"『현대북한연구』, 제19권 제2호(2016), pp. 94-100.

도전을 추호도 용서치 않고 섬멸적인 타격으로 대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외과수술식 타격이요, 선제타격이요 하는 것은 결코 미국만의 선택권이 아니며 그 타격방식도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다.[42] 다만 이는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맞대응은 아니며, '북한이 전쟁을 준비한다는 확고한 증거가 포착될 경우 (북한 미사일, 공군기지 등에 대해) 선제공격에 나선다'는 당시 한미의 논의에 대한 맞대응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43]

북한은 2003년 '작전계획 5030' 초안 작성 관련 보도가 있자 7월 1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7월 20일 노동신문 논평 등을 통해 작계 5030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다만 작계 5030에 '참수작전'과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담기지 않은 만큼, 북한의 대응도 '참수작전'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당시 북한의 대응은 '북침전쟁 도발책동을 걷어치우는 것이 좋다'며 억제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44]

제3절 분석의 틀

본 연구는 북한이 단순히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기존 통념의 수준보다 한 단계 더 들어가고자 하였다. 그동안 북한의 '참수작전'에 대한 반응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한 사례는 없었다.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어떠한 반응과 대응을 보였는지, 그 반응들은 수세적·공세적 등으로 유형화될 수 있는지, 북한의 '참

42) "北 軍총참모부 입장 발표 10년만의 일," 『연합뉴스』, 2009년 1월 17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2459009?sid=100(검색일: 2024년 1월 20일).

43) "왜 김정은은 보수만이 아닌 '민주' 정권까지 디스했을까?," 『프레시안』, 2024년 2월 10일;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402081159551606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검색일: 2024년 3월 12일).

44) "北, '작계 5030' 철회 거듭 촉구," 『연합뉴스』, 2003년 7월 20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00415042?sid=100(검색일: 2024년 1월 20일).

수작전'에 대한 대응이 시기별로 나뉠 수 있는지, 대응이 변화하는 데에는 어떠한 맥락이 자리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한미 '참수작전'이란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실제 시행한 작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2015년 8월 '참수작전'을 포함하는 '작전계획 5015'의 발효와 이후 한미연합훈련 등을 통한 숙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미 '참수작전'의 제도화, 훈련, 역량 고도화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참수작전'을 북한의 지도부에 대한 공격으로 한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수세적'·'공세적'·제도화된 '공세적' 대응 등 크게 세 가지 대응으로 나누고자 한다. 아래 표는 연구자가 제시한 북한의 세 가지 대응 관련 이념형적 구분이다.

【표 2-3】 북한의 세 가지 대응에 대한 이념형적 구분.

북한의 대응	'수세적' 대응	'공세적' 대응	제도화된 '공세적' 대응
도덕적 비난	0	△	X
'민족', '겨레' 등 가치 호소	0	△	X
대화 촉구	0	△	X
(핵) 선제타격 강조	X	△	0
정책·법·헌법 제도화	X	X	0

* 출처: 연구자가 직접 작성.

먼저 본 연구에서 규정한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수세적' 대응이란 한미의 '참수작전' 능력 배양 및 능력 현시에 대해, 군사적 대응 의지를 밝히는 대신, 도덕적 비난에 치중하거나, '민족', '겨레', '통일' 등 동일 가치에 대해 호소

하거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대응 등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수세적' 대응 단계에서 북한은 선제공격, 핵 선제공격 위협과 같이 한미가 위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발산하지 않는다.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공세적' 대응이란 한미의 '참수작전'에 대해 '선제공격', 특히 '핵 선제공격'을 포함해 대응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공세적' 대응은 한미의 '참수작전' 시도를 억제하고, 한미의 '참수작전'이 실행될 경우 보복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보다 적극적이다.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제도화된 '공세적' 대응이란, 임박한 '참수작전'에 대해 '핵 선제공격'을 포함해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정책・법・헌법 등 제도로 정비하고 권위를 부여한 것이다. 이중 헌법 개정은 가장 높은 수준의 제도화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대응이 변화해나가는 데 있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과정, 핵・미사일 고도화 과정에도 주목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동기에 대해서는 많은 모델이 각각의 설명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령 서동구(2014)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세이건의 3대 모델, 즉 안보모델(security model), 국내정치모델(domestic politics model), 국제규범・지위모델(norm model) 모두 설명력이 있다고 바라보았다.[45] 김보미(2017)는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에는 국가안보(state security)를 지키려는 목적, 독재 정권의 정권안보(regime security)를 지키려는 목적이 모두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46]

'작전계획 5015' 등을 통해 드러난 한미 '참수작전'은, 리더십・정치적・군사적 참수 등 여러 가지 '참수작전'의 유형 중, 특히 북한 수뇌부를 군사적 수단으로 타격해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북한에게 있어 지도자 안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며, 국가안보, 정권안보 유지의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

---

45) 서동구, "북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딜레마,"『통일연구원』, 제23권 제2호(2014), p. 88.

46) 김보미,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의 원인과 한계: 북한의 수직적 핵확산과 정권안보,"『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2호(2017), p. 39.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목숨을 타겟으로 하는 한미의 비대칭 전략 '참수작전'에 맞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한국 국민 '핵 인질화'를 실현 가능하도록 만드는 핵무력 고도화가 매력적인 대응 중 하나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다. 한미 '참수작전'에 의해 김정은 총비서가 사망하게 되면 한국 국민 역시 북한의 핵무기로 인해 사망한다는 일종의 '공포의 균형'을 핵무력 고도화를 통해 달성하면 김정은 총비서의 생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진지한 고려를 북한이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핵무력 고도화가 진행되면 이는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 양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핵무력 고도화가 진전될수록 북한은 한미 '참수작전' 위협에 보다 '공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나름의 근거들을 축적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는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점차 '공세적'으로 옮겨가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점차 '공세적'으로 변화해 나가며, 그 배경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있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가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점차 '공세적'으로 변하는 북한의 대응에 신뢰성을 불어넣은 배경이 되었다고 가정한다.

가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보다 '공세적'으로 바뀌어나갈 수 있었던 배경이었으며, 북한의 '공세적' 대응 능력과 의지에 대한 일정 부분의 신뢰성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제2장에서 '참수작전'의 개념, 사례와 함께 김정은 시기 이전 한미 '참수작전'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3, 4, 5장에서는 실질적인 연구 범위인 김정은 시기,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 수준에 따라 시기를 구분하고, 각 시기별 특징과 변화 요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3장 한미 ‘참수작전’ 등장과 ‘수세적’ 대응

제1절 한미 ‘작전계획 5015’와 북한의 ‘수세적’ 대응

1. 한미 ‘작전계획 5015’ 발효와 ‘참수작전’의 노출

2015년 한미 ‘참수작전’ 관련 중대한 움직임이 있었다. 2015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군사령부 사령관,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서명하며 ‘작전계획 5015’가 발효된 것이다. 작전계획이란 북한의 도발 상황에 대한 한미 연합군의 대응 시나리오다. 기존 ‘작계 5027’을 대체한 ‘작계 5015’는 한미 정찰자산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 움직임을 감시하고 남침 징후가 파악될 경우 방어와 함께 반격하도록 하였다. 사실상 선제타격하는 개념이 포함됐으며, 여기에는 북한 핵심시설 타격과 함께 ‘참수작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작전계획 5015는 2015년 8월 진행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처음으로 일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47]

2015년 8월 28일 한미 양국군은 당시 역대 최고규모의 ‘2015 통합화력 격멸훈련’을 실시하였다. 2015년 경북 포항 일대에서 진행된 한미 연합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에서는 한미 해병대가 해안 상륙뿐 아니라 북한 내륙 진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한미 특수부대 간에 유사시 북한 지도부를 제거하고 ‘참수작전’ 훈련까지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한미 ‘참수작전’과 관련 ‘작전계획 5015’ 발효 등 제도화, 한국 군 관계자의 직접적 언급이 나타난 것은 분명 중요한 사건이지만, 한미연합훈련 등 실질적 군사적 움직임까지 완전하게 수반된 것은 아니었다. 비록 작전계획 5015가 2015년 8월 진행된 을지프리덤

47) “공격형 ‘작계’로 바꾼 한·미, 북한 남침 땐 동시 선제타격,” 『중앙일보』, 2015년 8월 27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18532554(검색일: 2024년 1월 20일).

가디언(UFG) 연습에서 처음으로 일부 적용된 것으로 전해지지만,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은 2016년 3~4월 한미연합훈련을 통해서였다.

2015년에는 한국 군 관계자의 '참수작전'에 대한 언급도 등장하였다. 2015년 8월 27일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주최 안보학술세미나에서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육군 준장)은 "우리 군이 북한보다 앞서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심리전과 참수작전, 정보우위, 정밀타격 능력 등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기 한국과 북한은 긴장국면을 겪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상황을 수습하고 대화를 이어나가려는 움직임도 있었다. 당시 한반도 상황을 살펴보면, 우선 남북은 2015년 8월 긴장국면을 맞았다. 2015년 8월 4일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의 아군 추진철책 통로에서 한국 군이 북한군 목함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은 목함지뢰 사건이 일어났다. 이어 2015년 8월 20일 북한이 경기도 연천군 소재 대북 확성기를 목표로 포격하는 포격도발 사건까지 일어나자 한국은 전군에 최고경계태세를 내렸다. 이에 대응해 2015년 8월 2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전방지역(전선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였다. 다만 최고조에 오른 긴장국면을 수습하고자 2015년 8월 25일 한국과 북한 간 '8.25 합의'가 이루어졌다. 2015년 10월에는 30차 이산가족 상봉이 뒤따르는 등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뒤따르기도 하였다.

2. 북한의 '수세적' 대응의 관성적 유지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나서기 전 '참수'와 관련된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는 2개이며, 모두 노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 논평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기사 2개의 성격은 흡사하며, '수세적' 전환 이후 이어질 기사와는 다른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015년 9월 30일 노동신문에 실린 개인필명의 논평 《어리석은 모험에 매달리지 말라》의 전문을 그대로 소개한다. 논평은 9월 23일 한국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북한의 전략적 핵심 표적을 타격하기 위한 특수부대 편성과, 예하에 특수작전항공부대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런 상황에서 "긴장완화와 평화에 대한 겨레의 지향과 요구로 보나 모처럼 개선의 기회를 맞이한 북남관계의 현 상황으로 보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동족에 대한 변함없는 적대의식과 침략기도의 뚜렷한 발로로서 대화와 협력, 북남관계 개선에 역행하는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비판하였다. 논평은 또 "북과 남이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실현하기로 했지만 그것으로는 앞으로의 정세발전을 낙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남조선호전광들은 일촉즉발의 위기를 모면한 북남관계의 다행스러운 분위기를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공공연히 날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평은 "이미 지난 6월 작전계획 5015를 수립하고...유사시 그 누구에 대한 제거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참수작전 개념이라는 것까지 들고 나오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논평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게 공포를 주는 우리의 핵보검을 괴뢰군부깡패들 따위가 어째보겠다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멸행위"라며 "남조선당국이 북남관계의 파국을 바라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모험에 매달리지 말고 분별있게 처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논평의 특징은 미국이 아닌 한국, 나아가 한국 내에서도 '남조선호전세력', '군부깡패들' 등 일부 세력을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또한 한국으로 하여금 '겨레', '동족'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화 분위기 조성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논평은 북한이 '핵보검'을 갖고 있다고는 언급하지만 유사시 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표하지는 않는다.[48] 핵 선제사용에 대한 언급도 나타나지 않는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2015년 10월 31일 노동신문에 실

48) "어리석은 모험에 매달리지 말라," 『조선중앙통신』, 2015년 9월 30일.

린 개인필명의 논평 《북남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의 전문을 그대로 소개한다. 논평 《북남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그해 이뤄진 8월 남북 고위급긴급접촉이 “장기간 되풀이되어온 대결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고 북남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는 조건과 가능성을 마련한 중대한 계기”였다며 “우리 겨레 누구나 모처럼 어렵게 마련된 북남합의가 성실히 이행되어 북남관계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우리는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염원을 반영해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며 “북과 남은 이미 거둔 성과에 토대하여 관계개선을 적극 추동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논평은 “남조선당국의 대결악습은 북남고위급 긴급접촉 이후에도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며 “미국과 함께 2015 통합화력격멸훈련이라는 것을 역대 최대 규모로 벌려놓은 데 이어 북인권법 조작책동과 반공화국삐라살포 소동을 감행한 것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논평은 “동족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적대의식에 사로잡혀있는 남조선 집권세력에 있어 대북정책과 대결소동의 종국적 목표는 체제통일”이라며 “그들은 우리의 존엄높은 제도를 해치려는 기도를 버린 적이 없다”고 비판하였다. 논평은 “참수작전이니 뭐니 하며 수뇌부타격을 기정사실화한 작전계획5015를 꾸며내고...미일 상전들과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사실들은 외세와의 공조로 반공화국압살흉계를 실현하려고 날뛰는 그들의 반민족적 정체를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며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살리고 북남합의를 적극 이행해나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라고 밝혔다. 논평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해 북남합의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온 겨레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자주통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또 “남조선집권세력이 북남관계개선의 기회를 헌신짝처럼 차버린다면 그들은 두고두고 온 겨레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논평은 “남조선당국은 겨레의 지향을 똑똑히 보고 이성적인 판단과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촉구하였다.

해당 논평은 2015년 9월 30일 논평 《어리석은 모험에 매달리지 말라》와 마찬가지로 '겨레', '동족', '평화', '통일'을 언급하며 관계개선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하였다. 달라진 점은 앞서 9월 30일 논평에서 비판의 대상이 '남조선호전세력', '군부깡패들'이었다면 해당 논평에서는 '남조선당국', 당시 박근혜 한국 정부로 비판의 대상이 바뀐 점이다. 북한은 또한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입각해 자주통일과 평화를 이룩하려고 하는데 반해 한국은 미국·일본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동족 간 협력'에 나설 것을 분명히 하였다. 마지막으로 해당 논평은 "대결로 얻을 것이란 전쟁의 참혹한 재난밖에 없다"고 경고하지만, 이는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뿐이다. 해당 논평 역시 북한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논평은 '온 겨레의 저주를 받게 될 것', '못된 악습' 등 표현을 통해 도덕적인 비난을 가하는데 집중하였다.[49]

북한의 매체 발표 내용 외 이 시기 '참수' 관련 북한 내 상황을 일부 확인할 만한 한국 내 기사도 있었다. 한국 언론사 세계일보는 2015년 8월 31일 '정부 〃北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논의, 대북삐라 균형있게 대처〃' 기사에서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문선명 통일교 총재 3주기를 앞두고 평양을 방문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을 8월 27일 만난 자리에서 "어떻게 합의문 잉크도 마르기 전에 군부(국방부)에서 '참형'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냐"면서 "(협상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뒤통수를 치면 내가 무슨 힘을 갖고 다른 일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는 말을 꼭 전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김양건 부장은 이 자리에서 "기껏 합의해 놓고나니까 '참형'이라는 말이 나오니 기절초풍할 것 같았다"고도 말했다.[50] 이에 대해 한국 통일부의 정준희 대변인도 8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박상권 전 사장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들었다"고 확인하였다. 8월 31일 한국 언론이 보도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의 말을 통해서 북한이

---

49) "북남합의를 성실히 리행해야 한다", 『조선중앙통신』, 2015년 10월 31일.

50) "정부 〃北과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논의, 대북삐라 균형있게 대처〃," 『세계일보』, 2015년 8월 31일; https://www.segye.com/newsView/20150831001829?OutUrl=naver(검색일: 2023년 8월 23일).

얼마나 '참수', '참수작전'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또한 '튀통수 치다' 등의 표현으로부터 '참수작전'에 대해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이 시기 북한 대응의 특징을 확인해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시기 북한의 입장을 종합 분석하면,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수세적'인 특징을 나타낸다. 즉 '민족', '동족', '겨레', '통일' 등을 강조하면서 '참수작전', 한미연합연습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대화를 촉구하는 북한의 입장이 두드러진다. 이 시기 '참수' 관련 기사 중 나타난 북한의 핵 관련 가장 높은 수위의 입장은 핵 억제력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제정한 '자위적 핵보유법'에서 밝힌 바 있는 '억제·보복을 위한 핵무기 보유'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존 핵 태세를 유지하였다.

제2절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지속과 '수세적' 대응

이 시기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은 '수세적'인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한미 '참수작전' 관련 훈련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다소 관성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2015년 신년사에서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며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민족적 유대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었다. 북한은 목함지뢰 사건, 대북 확성기 포격도발 사건 등 군사적 도발을 하면서도 수위를 조절하는 태도를 보였다. 가령 북한은 2015년 8월 목함지뢰 사건 이후 한국에 먼저 고위급 대화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한미 '참수작전'의 본격적인 등장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유지됐다. 2015년 6월 한미 '참수작전'을 포함한 '작전계획 5015'의 발효, 2015년 8월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육군 준장)의 '참수작전' 공식 언급 등에 대해

우려·반발하면서도 북한의 대응 수준은 대결을 멈추고 협력으로 나오라는 기존의 대응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 시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을 살펴보면, 북한은 2006년 10월 제1차,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에 이어, 김정은 집권 이후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완료한 상황이었다. 북한은 제3차 핵실험에서는 고농축우라늄 핵실험을 단행했으며,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2013년 3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병진정책'을 채택하며 핵무력을 계속해서 증진시키겠다는 뜻을 나타냈고, 2015년에도 첫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1호' 수중 사출시험을 진행하는 등 핵·미사일 고도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북한은 2015년 10월 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는 신형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KN-14를 처음 공개하기도 하였다.

한국 국방부가 2014년 12월 발간한 국방백서(격년제 발간)에 따르면, 이 시기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40여kg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 시기 북한은 이미 한반도를 비롯해 일본, 괌 등에 대해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된다.[51] 또 이 시기 북한은 이미 사거리 1,300km 노동 미사일, 사거리 4,000km 무수단 미사일을 보유, 작전배치한 것으로 평가된다.[52]

다만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2015년까지 준중거리 미사일 발사가 1회,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2회에 그치는 등 이후 이어질 시기에 비해 양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2012~2015년 핵실험 횟수 역시 2013년 1회에 그쳐 2016~2017년 3회보다는 적었다.

---

51) 한국 국방부, 『2014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4), p. 30.

52) 정성윤, "북한 4차 핵실험의 의미와 파장," 『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제16집 제2호 (2016), p. 3.

【표 3-2】 김정은 집권 이후 2016년까지 미사일 발사현황

구분	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81	5	4	18	14	23
단거리	44	3	4	17	10	6
준거리	9			1		4
중거리	10					8
장거리	10	2				1
SLBM	8				4	4

* 출처: 정방호,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 강압외교’에 관한 연구,” (2022).

이호령(2024)은 북한이 2012~2014년 기간에는 기존 신형 방사포, 스커드 계열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군의 점검, 대열을 갖추는 데 주력했다고 분석하였다.[53] 정방호(2022)는 2009~2015년을 ‘핵무력 발전기’, 2016~2017년을 ‘핵무력 완성기’로 규정하며, 북한이 ‘핵무력 발전기’ 동안 단거리 계열을 중심으로 실전 능력을 검증하는 훈련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분석하였다.[54] 즉 북한은 동시 혹은 다발 발사 등을 통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무기체계의 실전 능력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아직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등 미사일이 등장하기 전이었다.

이 시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은 맞지만, 이후 시기와 비교할 때 북한이 특별히 핵·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며, 미국은 물론 한국을 위협하기에도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북한은 이 시기 한미가 ‘참수작전’ 필요성에 공감하며 실제 실행에 옮길 가

53) 이호령, “북한 핵 무력 증강과 무력 통일 노선,”『개원 33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 북한의 두 국가론과 민족 분리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2024. 4. 1.), pp. 25-45.

54) 정방호,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 강압외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22).

능성에 대해 얼마나 억제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대비가 되어 있는지 자문했을 가능성이 크다. 5개 전략동심원 모델에 따르면 '참수작전'은 국가 시스템 가장 안쪽에 있는 리더십을 향하며, 특히 3대 세습체제 북한에 있어 최고지도자의 안위란 무엇보다 중차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참수작전' 관련 한미의 공식 입장이 이어져 나오고 '참수작전'이 제도화·구체화될수록 위기의식이 커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미로 하여금 대화와 협력에 나오라고 촉구하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민족', '동족', '겨레 등 동질성을 강조하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한미가 자신들의 요구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만약 한미가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북한 지도부가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단순히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 이상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수 있으며 따라서 기존 관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즉 북한은 이 시기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수세적' 대응으로 나섰지만, 이때에도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수세적' 대응에서 벗어나야 할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었다. 이는 북한이 2015년 6월 한미 '참수작전'을 포함한 '작전계획 5015'이 발효된 후 1년도 안 되어 빠르게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공세적'으로 전환하는 배경이 되었다.

제4장 한미 ‘참수작전’의 구체화와 ‘공세적’ 전환

제1절 구체화된 한미 ‘참수작전’과 북한의 ‘공세적’ 전환

1. 구체화된 한미 ‘참수작전’

2015년 이뤄진 한미 ‘참수작전’ 제도화는 2016년 들어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비로소 구체화되었으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역량이 시현됐다. 2016년 3월~4월 한미연합 키리졸브(지휘소 훈련)·독수리훈련(야외 기동훈련)이 당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됐다. 키리졸브·독수리훈련에는 10만3천t급 핵추진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도 참가하였다. 독수리훈련의 하나로 실시된 3월 쌍룡훈련에는 4만1천t급 강습상륙함인 본험리처드함과 박서함이 참가했는데, 한미연합훈련에 4만t급 강습상륙함 2척이 동시에 참가한 것은 처음이었다. 3월 쌍룡훈련과 관련 내륙진격 작전은 2012년 쌍룡훈련 시작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전개됐다. 한국 해병대 3,000여 명, 미 해병대 9,200여 명 등 한미 상륙군 1만2200여 명과 한국 해군 2,000여 명, 미 해군 3,000여 명 등 5000여 명 한미 해군이 참가하였다. 항공자산으로는 미 해병대 MV-22 오스프리(Osprey) 수직이착륙기, AH-1 코브라 공격헬기, CH-47 대형수송헬기, UH-60 기동헬기, C-130 수송기 등이 투입됐다.[55] 주한미군사령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미 제1공수특전단, 75레인저연대 소속 특수전 병력이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 제1공수특전단은 태평양 지역에서 활동하는 특수부대로 이라크전, 아프간전에도 참전하였다. 75레인저연대는 핵심시설 파괴, 공중 강습 등 임무를 수행하며 이라크전과 아프가니

55) “쌍룡훈련_해병대,”『국방일보』, 2022년 8월 1일; https://kookbang.dema.mil.kr/newsWeb/20220801/1/BBSMSTR_000000100191/view.do(검색일: 2024년 1월 20일).

스탄전 등에서 핵심요인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주한미군이 특수부대 파견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양욱은 두 부대 외 '참수작전' 등 핵심작전을 수행하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6팀(일명 데브그루), 미 육군 특수부대 델타포스의 일부 부대원이 훈련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한 바 있다.[56]

2017년 들어서도 3월~4월 한미연합 키리졸브·독수리훈련 등을 통해 한미 '참수작전' 훈련, 간접적 역량 시현은 이어졌다. 2011년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 '참수작전'을 수행한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6팀, 일명 데브그루, 델타포스, 그린베레 등 미 최정예 특수부대가 역대 최대 규모로 파견됐다.[57] 미군은 해당 한미연합훈련에서 북한 지도부 제거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58] 또한 훈련에는 미군의 최신형 무인공격기인 '그레이 이글'(MQ-1C)이 한반도에 전개됐다. 소형 정밀유도폭탄을 탑재하는 그레이 이글은 중동지역에서 알카에다를 비롯한 테러단체 지도부 암살에 활용됐다. 그레이 이글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연속 비행과 고화질 감시를 할 수 있으며 유사시 북한 상공에 침투해 지휘부를 포함한 핵심 표적에 대한 정밀타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기간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해상훈련을 했고 핵잠수함 콜럼버스함(SSN 762)도 한반도에 전개하였다. 괌 앤더슨 공군기지의 전략폭격기 B-1B는 여러 차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고 주일 미 해병대의 F-35B 스텔스 전투기 편대는 한반도 상공에서 정밀폭격 연습을 하였다. F-35B 스텔스 전투기들은 실제 북한지역 폭격지점에 대한 위치정보를 부여받고 가상폭격 훈련을 진행하였다.

---

56) "'참수작전' 미군 특수부대 우리나라 투입,"『YTN』, 2016년 2월 4일; https://www.ytn.co.kr/_ln/0101_201602041452566952(검색일: 2024년 1월 20일).

57) "[단독] 美 특수전부대, 올해 한미연합훈련에 역대 최대규모 참가,"『연합뉴스』, 2017년 3월 13일; https://www.yna.co.kr/view/AKR20170312049600014?input=1195m(검색일: 2024년 1월 20일).

58) "[단독]트럼프에 보고된 대북 군사옵션은 선제타격 위한 사이버전-참수작전,"『동아일보』, 2017년 10월 13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71013/86726956/1(검색일: 2024년 1월 20일).

2017년 1월 2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가,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양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한동안 '참수작전' 역량 축적, 역량 현시는 이어졌다. 2017년 7월 5일 한국 군은 탄도미사일 현무-2C,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슬램-ER 공대지미사일발사 영상과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의 훈련 영상 등을 공개하였다. 이들 무기는 '참수작전'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무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한미는 7월 5일 같은날 동해안에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사격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다. 사격에는 한국군의 현무-Ⅱ와 미 8군의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미사일이 동원됐는데, 이와 관련해 합참은 "초탄으로 목표물을 명중시켜 적 지도부를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에는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미 공군의 전략무기인 스텔스 전투기 F-22 6대, F-35A 6대, F-35B 12대 포함, 한미 공군 항공기 230여대가 투입됐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24대가 한반도에 동시 전개된 것은 처음이었다. 중국 군사 전문가인 쑹중핑은 특히 F-22의 능력과 관련해 "F-22는 핵심목표만을 신속히 타격해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거나 핵심 지도부를 참수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59]

이 시기 공군을 통한 '참수작전' 역량 축적, 간접적인 역량의 시현도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였다. 2017년 9월 22일 북한이 수소폭탄을 실험하겠다며 미국을 협박하자 미국은 다음날인 9월 23일 B-1B 랜서 등 전투기 20대를 동원해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너머로 보냈다. 이들은 원산 인근 공역을 비행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참수작전'에 돌입했을 경우 북한군의 대응능력이 어떤 수준일지 확인하는 예행연습의 성격이었다는 일부 분석이 제기됐다.[60] 2017년 12월에는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59) "美 F-22·B-1B 등 참가 한미군사훈련에 中 "충돌위기 커져" 경고," 『연합뉴스』, 2017년 12월 2일; https://www.yna.co.kr/view/AKR20171202023900083?input=1195m(검색일: 2024년 1월 20일).

60) "미국의 B-1B 출격, '김정은 참수작전' 예행연습," 『노컷뉴스』, 2017년 9월 26일;

ACE)가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훈련에는 미 공군의 전략무기인 스텔스 전투기 F-22 6대, F-35A 6대, F-35B 12대 포함, 한미 공군 항공기 230여대가 투입됐다.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24대가 한반도에 동시 전개된 것은 처음이었다. 중국 군사전문가인 쑹중핑은 특히 F-22의 능력과 관련해 "F-22는 핵심목표만을 신속히 타격해 미사일 기지를 파괴하거나 핵심 지도부를 참수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61]

이즈음 북한이 '참수작전'에 대해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잇달아 제기됐다. 2017년 6월 15일 한국 국정원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참수작전'에 위협을 느껴 경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김 총비서가 '참수작전'에 대한 정보를 캐는 데 혈안이 되어있고 공개 활동을 32%가량 줄였다고 국회에 보고하였다. 2017년 8월 25일 일본 아사히 신문은 북한이 지난 2월 전직 KGB 요원 약 10명을 평양으로 초청했으며 이는 '참수작전'에 대한 대항책이라고 전해졌다고 보도하였다.

2017년 후반기는 한반도 긴장 수준이 매우 높아진 시기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8월 8일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면서 "북한이 위협하면 전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은 단순한 엄포 수준에 그치지 않았으며, 실제 군사력 행사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매체들이 이 시기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참수작전' 옵션을 보고받았다고 보도하였다. 2017년 4월 7일 미국 NBC 뉴스는 미 국가안보회의(NSC)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 김정은 제거 등을 포함한 대북전략을 제시했다고 보도하였다. 2017년 10월 한국 동아일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국방부로부터 특수부대 투입을 통한 김정은 제거 작전 등 북한을 선제타격하더라도 한반도 전쟁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군사옵션을 보고 받았다고 보

---

https://www.nocutnews.co.kr/news/4853810(검색일: 2024년 1월 20일).

61) "美 F-22·B-1B 등 참가 한미군사훈련에 中 "충돌위기 커져" 경고," 『연합뉴스』, 2017년 12월 2일; https://www.yna.co.kr/view/AKR20171202023900083?input=1195m(검색일: 2024년 1월 20일).

도하였다. 한국 중앙일보 역시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미국이 10개 남짓의 군사작전을 심각하게 검토했으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참수작전' 이후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방안이 당시 한미 군사작전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2020년 9월 27일 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하였다.[62] 해당 보도에 따르면 '참수작전' 방법으로는 특수부대 침투, 공군 스텔스기의 정밀 유도무기 타격 등이 고려됐다. 또 2018년 2월 28일 뉴욕타임스(NYT)는 마크 밀리 미 육군참모총장, 토니 토머스 미 특수전 사령관 등 미군 사령관들이 하와이에서 며칠간 북한을 겨냥한 비밀 전시작전 계획을 점검했다고 보도하였다.[63]

결국 이 시기 미국의 군사적 옵션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당시 기사들은 미국이 왜 북한 지도부 '참수작전'을 북한에 대한 주요 군사행동 고려대상 중 하나에 올렸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2017년 10월 13일 한국 동아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 국방부로부터 사이버전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명령전달체계를 무력화하고. 특수부대 투입을 통해 김정은 '참수작전'을 실행하는 대북 군사옵션을 보고 받았다. 목표는 '한반도 전쟁 위험 최소화', '전면전 확전 전 사태 종결'이었다. 즉, 미국으로서는 '참수작전' 등을 통해 북한군 지휘체계를 마비시키면, 전면전 위험과 북한 보복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태를 종결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관련 시나리오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64]

다만 북한이 2017년 11월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 한반도 상황은 북미간 대화 국면으로 전환됐고, 한동안 '참수작전' 역량 축적, 간접적인 역량의 시

62) "한국이 北에 평창 오라 손내밀 때…美는 김정은 참수작전 짰다," 『중앙일보』, 2020년 9월 27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881863#home(검색일: 2024년 1월 20일).

63) Helene Cooper and Eric Schmitt, "U.S. Banks on Diplomacy With North Korea, but Moves Ahead on Military Plans," *the NewYork Times,* 28 February 2018; https://www.nytimes.com/2018/02/28/world/asia/us-north-korea-military-war-planning.html?searchResultPosition=34(검색일: 2024년 1월 21일).

64) "[단독]트럼프에 보고된 대북 군사옵션은 선제타격 위한 사이버전-참수작전," 『중앙일보』, 2017년 10월 13일;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71013/86726956/1(검색일: 2024년 1월 20일).

현 움직임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2017년 말부터 2020년 말까지 한미 '참수작전' 역량 축적은, 한미연합훈련, 관련 부대 훈련 등이 아닌, 주로 군사자산 배치를 통해 산발적으로 이뤄졌다. 하나씩 살펴보면, 2018년 2월 21일 주한미군은 12대로 구성된 무인 정찰 및 공격기인 '그레이 이글'(MQ1C) 중대 창설식을 열었다. 주한미군은 2015년 그레이 이글을 전북 군산 기지에 배치하기로 한 바 있다. 그레이 이글은 한반도 전역에 대한 24시간 비행과 감시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였다. 그레이 이글은 또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 4발, 최신형 소형 정밀유도폭탄 GBU-44/B '바이퍼 스트라이크' 4발 등을 장착, 유사시 표적을 직접 타격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그레이 이글'이 유사시 '참수작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일부 평가가 나왔다.[65] 또 2019년 12월 한국 공군은 다목적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의 최초 전력화를 공식 선언하였다. 한국은 앞서 2014년 미국과 F-35A 40대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F-35A는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 킬체인(Kill Chain, 핵·미사일 선제타격)의 핵심 전력이며, 유사시 북한 지휘통신시설, 주요 군사시설 파괴와 '참수작전' 이행에 활용될 것으로 평가된다. (2019년 12월 이후 한국 공군의 F-35A 40대 배치는 순차적으로 진행됐고 2022년 1월 배치가 완료됐다. 2023년 12월 차기 전투기 2차 사업 기종도 F-35A로 결정됐으며 2028년까지 20대 추가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2020년 주한미군은 '참수작전'용 무인기로 불리는 '그레이 이글'을 개량해 비행시간, 무장 탑재량을 늘린 '그레이 이글-ER'(Extended Range)을 추가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기 이뤄진 '참수작전' 관련 중요한 움직임 중 하나는 한국의 '참수작전' 부대 창설이다. 2017년 12월 창설된 병력 1,000여명 규모의 육군 '특수임무여단'은 특수전사령부 산하 1개 여단 인원, 장비를 보강해 개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9월 7일 영국 더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

65) "'美참수작전'에 北침묵, 김정은 5일째 두문불출,"『조선일보』, 2020년 1월 6일;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6/202001060018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검색일: 2024년 1월 20일).

(Navy SEAL) 6팀, 일명 데브그루(DEVGRU)가 한국 '참수작전' 부대 훈련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9월 4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 지도부에 대한 참수작전이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자 "개념 정립 중이며 금년 12월 부대를 창설해 전력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는데 이를 보면, 군은 '참수작전'이라는 직접적인 용어 사용은 피하면서도, '참수작전' 부대 창설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굳이 숨기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수임무여단'이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창설됐지만, 추진이 시작된 것은 박근혜 정부 시기였다. 2017년 1월 국방부는 '2017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유사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을 올해 조기에 창설하는 계획을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수임무여단'은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형성되며 활동이 소강상태에 접어들기도 했지만 명맥을 이어갔다.

이밖에 사실 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2017년 5월 북한은 실제 한미로부터 김정은 암살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2017년 5월 5일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 등은 미국 CIA와 한국 국정원 등이 공모해 생화학물질을 사용해 김정은 총비서의 암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했고, 2017년 5월 12일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 공보문 발표》 글을 통해서는 유엔이 이 문제를 적극 다루고 북한의 '반테로타격전 지원'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66] 이 같은 북한의 주장은 약 3년 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일부 정황이 뒷받침되기도 한다. 2020년 5월 22일, 2023년 1월 20일 UPI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이병호 전 원장은 재임 중 김정은 총비서를 암살하려는 북한 내 혁명조직의 존재를 파악해 이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66)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 공보문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7년 5월 12일.

2. 북한의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공세적’으로 전환됐다. 이 시기 북한 매체 기사, 주요인사들의 입장 표명 등을 통해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 입장을 살펴볼 수 있다.

2016년 ‘참수’와 관련된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는 242개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17년에도 이어져, ‘참수’ 관련 조선중앙통신의 201개 기사가 발표됐다. 2017년 ‘참수’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해외에서 북한을 지지하는 단체 등의 움직임에 대한 8개의 보도도 진행하였다. 한국 내부 여론 관련 보도는 10개였다. 이밖에 ‘참수’, ‘참수작전’ 관련 한국 매체 뉴스 보도를 인용한 기사로는 4월 9일 남조선괴뢰호전광들 특수작전용수송비 배비, 11월 28일 남조선괴뢰호전광들 참수부대 조작을 획책 기사가 있었다.

‘참수작전’에 대한 조선중앙통신 기사의 급격한 증가는 곧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형성되어가던 2018년부터는 ‘참수’ 관련 조선중앙통신의 기사가 급격하게 줄었다. 이 기간 ‘참수’ 관련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는 2018년 7개, 2020년 1개,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법’ 제정 전까지 1개다. 2019년, 2021년 ‘참수’ 관련 조선중앙통신에서 발표된 기사는 없다.

2016년 ‘참수작전’ 관련 조선중앙통신의 기사에는 군사적 위협과 경고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또한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기존 억제·보복 능력을 강조하는 데에서 벗어나 선제공격을 통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핵선제공격 대응까지 언급하기도 한다. 이 시기 북한은 ‘참수작전’에 대한 자신들의 대응이 억제·보복을 강조하는 정도의 수준인지, 선제공격까지 가능한 수준인지, 나아가 핵 선제공격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해 고정되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한미 ‘참수작전’ 등에 대해 선제공격, 핵선제공격 대응을 언급한 주요 기사를

살펴보면, 2016년 2월 23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즉시 징벌할것이라고 강조》,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는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것이다--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기사를 통해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중대성명을 전하였다. 북한이 2016년 모든 매체 통틀어 '참수작전' 관련 발표한 첫 번째 글이기도 하다. 최고사령부는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마지막 도발에 매달리고 있다"며 "그것이 바로 우리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을 통하여 체제붕괴를 실현해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미제 침략군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거의 모든 특수작전무력들과 이른바 족집게식 타격에 동원되는 침략무력이 일시에 남조선에 쓸어든 적은 일찍이 없었다"고 밝혔다. 중대성명은 "극악무도한 참수작전과 체제붕괴 책동은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의 극치"라며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혁명무력이 보유하고 있는 강위력한 모든 전략 및 전술타격수단들은 이른바 참수작전과 족집게식 타격에 투입되는 적들의 특수작전무력과 작전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수작전'과 관련해 북한이 '선제적 작전수행'에 대해 언급한 것은 2월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이 최초이다. 북한은 해당 중대성명을 통해 1차 타격대상으로 한국 청와대, 정부, 공공기관을, 2차 타격대상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미군기지와 미국 본토를 설정했다고 밝혔고, 미국 본토를 보복 타격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유사시 한미 '참수작전'을 포함하는 '작전계획 5015'이 사상 처음으로 적용된 채 진행될 2016년 3월 한미연합연습을 앞두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북한은 '우리 민족의 공동재보인 핵억제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유사시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67] 이는 가장 높은 수위의 '공세적' 대응 입장을 표명하기 전, 일단 한미연합연습의 구체적 진행상황을 지켜보고자 한 것으

67)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는자들을 가차없이 징벌해버릴것이다-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조선중앙통신』, 2016년 2월 23일.

로 추측된다.

2016년 3월 4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을 지도》 기사를 보도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전날 신형방사포 발사장면을 참관하며 “적들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생존권을 해치려고 발광하면서 이른바 《참수작전》과 《체제붕괴》와 같은 마지막도박에 매달리고있는 것으로 하여 정세는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총비서는 또 “우리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앞으로도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더욱 강화하여 힘의 균형을 이룩하는것뿐”이라며 “실전배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쏴버릴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실상 한미 ‘참수작전’의 대상자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직접 ‘참수작전’과 관련해 ‘선제공격적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지시・강조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김정은 총비서의 입장 표명은 북한 내 어떠한 발표보다 무게감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길이 핵무력 증강을 통한 힘의 균형이라는 김정은 총비서의 진단이 특징적이다. 달리 보면, 이 시점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아직 북한의 핵무력이 충분하지 않아, ‘힘의 균형’이 이룩되지 않았다고 진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서는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도’ 등을 강조했지만, 아직 ‘핵선제공격’ 입장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68]

2016년 3월 6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실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담화에서 다음날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에 각종 전략자산들이 동원된다고 언급하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이 이번 합동군사연습에서 그 무슨 참수작전과 족집게식 타격의 현실성을 검토하겠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68)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구경방사포시험사격을 지도,”『조선중앙통신』, 2016년 3월 6일.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대응방식은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하게 될 것”이라며 ‘선제공격’ 경고를 이어갔다. 또 “전략적 종심이 깊지 않은 우리나라의 조건에서 미국의 첨단군사장비들과 특수부대의 불의적인 기습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자기를 지키는 길은 단호한 선제공격뿐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선제타격했든 관계없이...미국이 져야 한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선제공격’ 옵션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담화에는 “우리에게는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도는 핵무력강화에 의한 힘의 균형을 이룩하는 것뿐이라는 결단 밑에 억척같이 다져온 무진막강한 핵억제력이 있다” 등에서 볼 수 있듯, 다시 한 번 ‘힘의 균형 이룩’과 ‘핵억제력’에 대해 강조하는 내용도 명시되어 있다.[69]

키리졸브연습, 독수리훈련이 시작된 2016년 3월 7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국방위원회 무모한 침략전쟁의 총포성을 도발자들의 참혹한 장송곡으로 만들어 놓을것이라고 경고》 기사를 통해 국방위의 성명을 전하였다. 국방위는 성명을 통해 1. 군대와 인민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도발광기에 전면대응하기 위한 총공세에 진입할 것. 2. 무자비한 섬멸적 타격을 가할 수 있게 선제공격적인 군사적 대응방식을 취하게 될 것. 3. 군대와 인민은 적들이 감히 우리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참수작전을 떠들며 사소한 군사적 망동이라도 부린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의의 통일성전으로 우리 민족의 최대숙원을 성취할 것. 등 ‘원칙적 입장’을 천명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방위는 두 번째 원칙적 입장과 관련해 “우리의 군사적 대응조치도 보다 선제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핵타격전이 될 것”이며 “정의의 핵선제타격전은 우리의 최고사령부가 중대성명에서 지적한 순차대로 실행”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같은 국방위의 ‘핵선제타격’ 입장은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제시된 것이며, ‘참수작전’에 대한 명시적인 입장은 3. “적들이 감히 우리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참수작전》을 떠들며 사소한 군사적망동이라도 부린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6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6년 3월 6일.

않고 정의의 통일성전으로 우리 민족의 최대숙원을 성취할 것"으로 제시되었다.[70]

2016년 3월 16일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 《천만군민은 수령결사옹위성전에 총궐기하여 천하무도한 적들의 도발망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다 --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이 조선중앙통신에 실렸다. 특별성명은 '참수작전'과 관련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적들이 지금까지 벌려온 합동군사연습을 한계단 승화시켜 유사시 북의 최고수뇌부와 핵, 미싸일 등 북의 핵심시설을 정밀타격하는데 초점을 맞춘 내륙진공작전 훈련을 벌린다고 뇌까리면서 우리의 핵보유능력을 막고 핵통제권을 장악하려면 참수작전과 같은 특수작전 이외의 다른 길은 없다고 공공연히 떠들어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성명은 "적들이 특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즉시적인 선제타격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제타격'에 대한 입장을 이어갔다.[71]

독특한 점은 3월 16일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법에는 나라의 최고존엄이 위협당하는 경우 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나라들과 대상들은 핵타격수단들을 포함한 모든 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선제소멸하게 규제되여있다."는 주장이 담긴 점이다. 이는 김정은 총비서가 위협당하는 경우 핵무기 등 모든 수단으로 선제공격한다는 내용이 제정돼 있다고 강조하며 억제력을 높이려고 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의 주장과 다르게 북한이 2013년 4월 1일 채택한 '자위적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에는 나라의 최고존엄이 위협당하는 경우 핵타격수단들을 포함해 선제소멸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해당 법 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

70) "조선 국방위원회 무모한 침략전쟁의 총포성을 도발자들의 참혹한 장송곡으로 만들어놓을것이라고 경고,"『조선중앙통신』, 2016년 3월 7일.

71) "천만군민은 수령결사옹위성전에 총궐기하여 천하무도한 적들의 도발망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것이다 -- 공화국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조선중앙통신』, 2016년 3월 16일.

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와 해당 법 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할수 있다.”를 보면 ‘선제타격’이 아닌 핵의 억제·보복적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법 전문에 걸쳐 ‘참수작전’ 혹은 북한 지도자의 위협과 관련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2016년 3월 16일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에 담긴 ‘최고존엄이 위협당할 시 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향후 2022년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되는 핵무력정책 제3조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지휘부가 위험에 처하면 자동적으로 핵타격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원형이 등장한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2016년 3월 29일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외무상 따쓰통신사 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 기사를 통해 리수용 외무상이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였다. 리수용 외무상은 “(한미) 전쟁연습은 우리에 대한 핵 선제공격은 물론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참수작전까지 실행하는 실동적인 전쟁수행방식으로 감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핵전쟁광기에 대처하여 우리 군대의 군사적 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하였으며 단호한 핵선제공격의지를 밝히였다”고 강조하였다. 리수용 외무상의 인터뷰는 ‘참수작전’을 도모하는 한국, 미국을 향해 핵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북한의 가장 높은 수준의 ‘공세적’ 대응 입장이, 북한 고위급 간부를 통해 재확인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리수용 외무상 인터뷰에서는 ‘평화’에 대한 언급도 함께 등장한다. 리수용 외무상은 “오늘 조선반도는 열핵전쟁이냐 평화냐 하는 기로에 서있다”며 “긴장격화의 악순환을 막고 전쟁위험을 제거하며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면 나타난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근원을 바로 보고 근원치료를 위한 대책부터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72]

---

72) “조선외무상 따쓰통신사 편집국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6년 3월 29일.

2016년 3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기사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려드는 원쑤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정해놓고 핵위협을 끊임없이 가증시키며 덮칠 기회만 노리고있는 조건에서 그 사소한 기미라도 보이는 경우 우리 군대가 단호한 핵선제타격으로 대응하는것은 나라의 안전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명백한 자위권행사로 된다.”고 강조하며, 다시 한번 ‘핵선제타격’ 입장을 밝혔다.[73] 북한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외무성 관련 인사들이 3월 29일, 3월 31일 연이어 전면에 나서면서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핵 선제공격’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6년 4월 7일 조선중앙통신은 《미국의 《비핵세계》 타령은 조선에 대한 핵전쟁전주곡이다－조선중앙통신사 고발장》에서 “올해 3월 7일부터...키 리졸브, 독수리 16 합동군사연습은 북침핵전쟁수행의 현실성을 최종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참수작전, 족집게식타격 훈련들을 노골적으로 감행한 것이 그를 실증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미국이 침략적인 핵전쟁을 도발할 기미를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우리는 미국의 본토에 무자비한 핵성전불세례를 안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의 핵무기는 기본적으로 자위적 방어 수단이지만, 유사시 미국 본토에 대한 선제적 핵공격도 할 수 있다며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열어둔 것이다.

고발장은 북한의 핵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핵무력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인 수소탄제작과 탄도로케트 대기권재돌입에 필요한 모든 첨단기술을 완전히 장악하였으며 소형화, 표준화, 규격화된 다종의 핵탄을 대량생산할수 있는 능력까지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주장하였다.[74] 당시 북한은 3월 9일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로케트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며 은색 구형 물체를 공개했을 뿐, 이와 관련 5차 핵실험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 글에서 드러난 자신

7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6년 3월 31일.

74) “미국의 《비핵세계》 타령은 조선에 대한 핵전쟁전주곡이다－조선중앙통신사 고발장,” 『조선중앙통신』, 2016년 4월 7일.

들의 핵 능력에 대한 언급은, 일종의 허세부리기(bluffing)일 가능성이 있으며, 길게 보면 앞으로 자신들이 나아갈 방향을 은연 중 나타냈다고도 할 수 있다.

2016년 4월 30일 《위대한 백두령장의 령도따라 노도쳐나가는 우리의 힘을 당할자 이 세상에 없으며 선군조선의 백승의 신화는 영원할 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보면, 정부, 정당, 단체는 연합성명을 통해 "적들이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까지 겨냥하며 피눈이 되어 덤벼드는 조건에서 이를 제압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 우리 공화국의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정당, 단체는 "핵탄적용수단들의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하여 지상과 공중, 해상과 수중의 임의의 공간에서 임의의 시각에 도발자, 침략자들을 선제타격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높은 수준에서 완비한 것은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놓게 한 중대사변"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핵탄두 투발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핵 선제타격' 능력을 완비할 경우,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북한의 셈법 내지 기대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된 2016년 8월 22일 군 총참모부는 다시 한 번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였다. 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위임에 따라' 다음의 원칙적 입장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1. 적공격집단들에 선제적인 보복타격을 가할 수 있게 항시적인 결전태세를 견지하고 있다는 것", "2. 신성한 령토와 령해, 령공에 대한 사소한 침략징후라도 보이는 경우 가차없이 우리 식의 핵선제타격을 퍼부어 도발의 아성을 재더미로 만들어버린다는 것", "3. 앞으로도 미제와 남조선괴뢰들의 핵전쟁도발책동을 영원히 끝장내기 위해 멸적의 총검을 더 높이 추켜들 것"이 그 원칙적 입장에 해당한다. 2번째 원칙과 관련해 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수령옹위, 제도사수, 인민보위는 우리 혁명무력의 불변의 최대사명이고 성스러운 본분"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은 '침략징후'가 보일 경우 '핵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입장은 나왔지만, '수뇌부 제거작전'이나 '참수작전'이 감행될 시 '핵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명시적 입장은 나타나지 않았다.[75]

해당 성명은 '위임에 따라' 입장 천명이 이뤄졌다고 밝혔는데, 이는 사실상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 즉, 김정은 총비서는 '사소한 침략 징후라도 보일 시 '핵 선제타격'을 불사한다는 입장을 재차 나타냈으며, 침략 징후에는 '수령'을 향한 '참수작전' 징후도 포함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2016년 9월 2일 조선중앙통신은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모험성을 폭로한다－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백서》를 실었다. 인민군 판문점대표부는 "핵전쟁광신자들이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신성한 령토와 령해,령공에 대한 사소한 침략징후라도 보이는 경우 가차없이 우리 식의 핵선제타격을 퍼부어 도발의 아성들을 모조리 재더미로 만들어버린다는것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다."며 '핵선제타격'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참수작전'과 관련해서는 "작전계획5015에는...우리의 수뇌부를 제거한다는 천인공노할 참수작전까지 들어있다"고 언급하였다.[76]

2017년 3월 26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에서 총참모부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에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 실(Navy SEAL) 6팀, 일명 데브그루(DEVGRU) 등이 참가한 사실에 주목하였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린 미제와 괴뢰군부호전광들의 특수작전흉계가 명백해지고 위험천만한 선제타격 기도까지 드러난 이상 우리 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 우리 식의 선제타격전으로 그 모든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 "특수작전과 선제타격에 투입된 미국과 괴뢰들의 작전수단들과 병력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 그대로 전개되여있는 한 임의의 시각에 사전경고없이 우리 군대의 섬멸적타격이 가해지게 된다는 것", "우리에 대한 특수작전, 선제타격이 개시된다면 그것은 곧 미제국주의의 비참한 괴멸과 남조선괴뢰들의 최후멸망을 고하는 력사적사변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75)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미국과 남조선에 무서운 징벌 가해질 것이다," 2016년 8월 22일.

76) "침략적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의 모험성을 폭로한다－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백서,"『조선중앙통신』, 2016년 9월 2일.

북한은 해당 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를 통해 자신들이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6팀, 일명 데브그루의 역할 및 능력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우리 식' 선제타격 의지를 보이면서도 '핵선제타격'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77]

2017년 3월 29일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는 "전략적종심이 깊지 않은 우리 나라의 조건에서 미국의 첨단핵전략자산들과 특수작전부대들의 불의적인 선제공격을 막고 자기를 지키는 길은 단호한 선제공격뿐"이며 "미국이 핵위협공갈을 가증시키다 못해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주요전략기지들을 특수작전으로 제거하겠다고 선포한이상 우리가 선제타격으로 대응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자위권의 행사로 된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는 한반도의 전략적 종심이 깊지 않아 유사시 한미의 '참수작전' 시도를 사실상 막아내기 어렵고, 따라서 선제공격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북한의 분석이 내포된 것으로 보인다. 또 유사시 한미의 공격 가능성과 '참수작전'에 대해 '선제타격'으로 대응하는 것이 '응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재차 합리화에 나선 모습이다.[78]

2017년 4월 6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이 조선중앙통신에 실렸고 영어번역본도 함께 발표됐다. 외무성 비망록은 미국이 "핵전략자산들을 동원해 최악의 기습 핵선제타격위협을 가해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미국과 추종세력들이 엄중한 도발행위를 감행할 때마다 선전포고로 된다는 데 대하여 수십차례 경고"했는데 "지금처럼 광란적으로 벌어진 적은 일찍이 없으며", "우리는 부득불 경고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글은 외부 위협에 대해 '선제타격'이 가능하다는 북한의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있다. '참수작전'과 관련해서는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천하무도한 행위들이 꺼리낌없이 감행되고있는 가운데 수뇌부제거를 노린 특수작전이 공공연히 실전단계에서 준비되고있다."고 밝혔다. 글은 유엔헌장 제51조 등을 언급하며 "단호한 선제타격으로 그(미국)를 철저히 짓부셔버릴 합법적인 권리를 보유하고있다."고

77)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 2017년 3월 26일.

7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조선중앙통신』, 2017년 3월 29일.

도 주장하였다.[79] 해당 글을 영어번역본과 함께 발표한 것은 결국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핵 선제타격'에 맞서 '선제타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치 실천에 옮길 수 있을 것처럼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2017년 10월 13일 동아일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일 미 국방부로부터 특수부대 투입을 통한 김정은 '참수작전' 등 북한을 선제타격하더라도 한반도 전쟁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군사옵션을 보고 받았다고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해 10월 19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싸이버전과 배합된 참수작전 강행기도가 포착되면 그 즉시 우리 식의 무자비한 선제타격전이 개시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였다.[80] 북한은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의 영어 번역본도 함께 발표했으며, 역시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이 기간 북한은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북한식 '참수작전'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모습도 보였다.

2016년 3월 12일 북한군 참모부가 성명을 발표하였다. 한국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북한군 총참모부 성명은 사상 처음이었다. 총참모부는 성명에서 "존엄높은 최고사령부의 위임에 따라", 즉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뜻에 따라 "쌍룡훈련에 투입된 적집단들에 대한 선제적인 보복타격작전수행에로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총참모부는 또 "평양진격을 노린 반공화국상륙훈련에는 서울을 비롯한 남조선 전지역해방작전으로, 족집게식타격 전술에는 우리 식의 전격적인 초정밀기습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한미가 북한 내륙까지 진입하는 '평양진공작전' 개념, '참수작전'과 족집게식 타격을 훈련에 포함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읽히는 내용이다. 다만 성명 전문에 있어 '핵선제타격'은 물론 '핵억제력', '핵보유' 등 '핵'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북한이 총참모부 성명을 통해 당시 한미연합훈련에 대응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

7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비망록," 『조선중앙통신』, 2017년 4월 6일.

80) "미국은 어리석고 무모한 경거망동이 가져다줄 파멸적인 대재앙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것이다－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담화," 2017년 10월 19일.

비서' 뜻에 따라 '선제적인 보복타격' 태세로 전환한다고 밝히면서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분석된다.[81] 여기에서 '선제적인 보복타격'이라는 표현은 억제·보복 강조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에도 북한식 '참수작전'에 대한 공공연한 행보가 이어졌다. 2016년 11월 4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한국 주요요인 암살 등 임무를 가진 특수작전대대를 방문하였다. 2016년 12월 11일 북한 관영매체 노동신문은 북한군이 11월 청와대를 본뜬 시설물을 타격하는 훈련 모습을 공개하였다. 앞서 10월 한미가 북한 내륙지역에 특수부대를 공수하는 훈련을 진행한 것에 대한 대응이었다.

2017년 3월 26일 한미연합훈련에 미 특수전부대가 참가하자, 이와 관련해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를 통해 '우리 식 선제적 특수작전'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북한은 '참수작전'에 대한 해킹 시도들도 병행하였다. 북한은 이 시기 '참수작전'에 대한 해킹을 시도하기 시작했고, 일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9월 국방통합데이터센터(DIDC)가 북한 추정 해커들에게 뚫렸다고, 한국 국방부가 12월 5일 밝혔다. 군 당국은 어떤 내용이 유출됐는지는 함구하였다. 이와 관련해 12월 9일 한국 언론 동아일보는 해킹된 내용은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유사시를 대비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시나리오 일부, 특전사 작전 관련 군사비밀(일부)이라고 보도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2017년 10월 10일 2016년 9월 해킹으로 '참수작전'의 상세한 내용, 작계 5015 등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이 시기 김정은 총비서가 '참수작전'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했다는 분석 및 정황들도 나왔다. 2017년 6월 15일 한국 국정원은 국회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참수작전'에 상당한 위협을 느껴 경호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국정원은 또 김 총비서가 '참수작전'에 대한 정보를 캐는 데 혈안이 되어있고 공개 활동을 32%가량 줄였다고 보고하였다. 2017년 8월 25일 일본 아사히 신문

81) "미제침략군과 남조선괴뢰군의 자멸적인 《평양진격》 훈련에 선제적인 서울해방작전으로 단호히 대응할것이다－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성명," 2016년 3월 12일.

은 북한이 지난 2월 전직 KGB 요원 약 10명을 평양으로 초청했으며 이는 '참수작전'에 대한 대항책이라고 전해졌다고 보도하였다. 2022년 8월 21일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마이클 매든 객원연구원은 '38노스 NK 리더십워치' 홈페이지에 지난 5월 촬영한 구글어스 분석 보고서를 올렸다. 김정은 총비서 평양 집무실 주변 여러 건의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포착됐고 매든 연구원은 "참수작전을 우려해 지은 건물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기 알려진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해킹 시도, 김정은 총비서의 '참수작전' 대응책 준비 정황 등은 북한이 '참수작전'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지 시사하는 단서라고 하겠다.

북한은 '참수작전'에 대한 대응을 '공세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외교적 노력, '참수작전'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노력도 기울였다. 또 일부 도덕적 비난을 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2016년 3월 31일, 4월 2일에는 외무성 대변인 관련 기사가 조선중앙통신에 실렸다. 3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기사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복수의 문장을 통해 '참수작전'의 부당함을 주장하였다. 외무성 대변인은 "주권국가의 수뇌부를 특수작전으로 제거하겠다고 내놓고 떠들며 날뛰는 미치광이같은 도전을 용인할 나라나 정부는 이 세상에 없다."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려드는 원쑤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고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참수작전》이라는것을 실제적으로 준비하고있는것을 뻔히 보면서 참고 자제한다는것은 절대로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82] 4월 2일 조선중앙통신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대답》 기사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에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미국의 충실한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며 "미국의 핵전쟁연습이 중지되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외면하는 이상 우리 공화국은 제 힘으로 자기를 지키는 정정당당한 자위적 권리를 계속 행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83]

---

8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6년 3월 31일.

8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6년 4월 2일.

거친 표현을 제한다면, 핵심 내용은 '국제사회가 한 주권국가의 지도자가 참수작전의 위험에 놓여있는 상황을 묵인'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며,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서 '정정당당하게' 자신들만의 군사적 대응을 계속해나가겠다는 것이다.

2016년 6월 13일 북한 외무성은 유엔 사무국에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 포기,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요구하는 정부·정당·단체 연석회의 참가자 일동 명의의 서한을 전달하였다. 또 2017년 3월 6일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 한미연합훈련을 안보리 의제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얼마 뒤인 2017년 4월 7일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유엔 안보리에 "작전계획 5015의 참수작전과 평양진격작전 등은 심각하고 매우 공격적"이며 한미가 "수뇌부에 대한 정밀타격을 통한 특수작전을 거론하며 북한을 모욕"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거듭된 서한 전달은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노력과 설득을 통해 한미 '참수작전' 위협을 줄여보려는 북한의 노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5월 5일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은 미국 CIA와 국정원 등이 공모해 생화학물질을 사용해 김정은 총비서의 암살을 시도했다고 주장했고[84], 일주일 뒤 2017년 5월 12일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 공보문 발표》 글을 통해 "유엔헌장 제1조 1항에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 및 제거하며 침략행위 또는 기타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의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집단적조치를 취할데 대하여 밝혀져있다."며 유엔이 이 문제를 적극 다루고 북한의 '반테로타격전 지원'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였다.[85]

해당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미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 대한 암살을 기도한 것이며 상당히 중대한 사건이다. 다만 이때에도 북한은 유엔 헌장을 언급하

84) "정의의 소탕전으로 테로의 총본산인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살인악마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보위성 대변인성명," 2017년 5월 5일.

85)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부 공보문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7년 5월 12일.

며 국제사회의 틀 안에서, 외교를 통해 김정은 참수 위험을 줄이고자 노력하였다.

이밖에 북한이 한반도 밖 미국의 '참수작전' 실행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단서도 나타났다. 2020년 1월 3일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 인근에서 공군 무인기 MQ-9을 투입,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해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부대 쿠드스군 총사령관을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북한은 이에 대해 2020년 1월 5일 선전매체 메아리를 통해 미국 공습을 비난하며 중동이 미국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0년 1월 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중국, 러시아가 미국을 비난했다는 보도를 통해 에둘러 미국의 공습을 규탄하였다. 2022년 5월 31일 북한 외무성은 미국의 반테러 비협력국 재지정에 반발, 재차 거셈 솔레이마니 암살 등 과거 미국이 단행한 참수작전을 거론하면서 "미국에야말로 사상 최대의 테러지원국"이라고 비난하였다.

제2절 북한 핵무력 완성 선언과 '공세적' 전환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공세적'으로 전환한 시기, 주목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 중 하나는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높였다는 사실이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어 2016년 3월 9일 "핵탄을 경량화"해 "탄도로케트에 맞게 표준화, 규격화를 실현"했다며 은색 구형 물체를 공개하였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북한은 2016년 9월 9일 정권 수립일에 5차 핵실험을 진행하였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5차 핵실험 직후 성명을 통해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된 보다 타격력이 높은 각종 핵탄두를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였다. 이듬해 북한은 2017년 9월 3일 오전 장구(땅콩) 모양의 수소탄 탄두를

공개하고 당일 6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북한이 2년간 3번의 핵 실험을 진행한 것은 2016년~2017년 시기가 유일하다. 북한이 1년간 핵실험을 2번 감행한 것 또한 2016년이 유일하다. 남성욱(2017)은 6차 핵실험에서 이루어진 수소탄 실험은, 북핵이 개발단계를 넘어 완성단계로 이동함을 의미한다고 평가하였다.[86]

한국 국방부는 2016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50여kg을 보유하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도 상당 수준으로 진전시키고 있으며, 핵무기 소형화 능력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같은 평가는 2018 국방백서, 2020 국방백서에서도 유지됐다.[87] 2017년 9월 4일 한국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들어갈 정도로 핵탄두 소형화·경량화에 성공했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하였다.

스웨덴 조사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거의 매년 증가하였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2015년 5월 북한이 6~8개의 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핵탄두를 개발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며 핵탄두 소형화까지 기술적 진보를 이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2016년 6월에는 그 해 1월 기준 북한이 핵탄두 10개와 이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가동할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배치할 능력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2022년 6월에는 북한이 20개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45~55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우라늄-235 또는 플루토늄-239)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실전용 핵탄두를 생산했다는 공식적인 증거는 없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핵탄두를 소량 보유했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

86) 남성욱,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미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전망," 『통일전략』, 제17집 제4호(2017), pp. 55-110.

87) 한국 국방부, 『2016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16), p. 29.

북한은 미사일 역량에 있어서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2016년 1월, 9월 미사일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 모의시험, 고체로켓 엔진시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지상 분출시험 등을 진행하였다. 북한은 2017년에도 북극성-2형 발사, 화성-12, 14, 15형 미사일 시험발사 등 미사일 역량 고도화를 이어갔고, 이는 미국 본토, 일본 본토, 미국 괌 기지 등에 대한 북한의 타격능력 증대로 연결됐다.

2017년 7월 4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고각발사했고 2017년 7월 28일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을 또다시 고각발사하였다. 7월 28일 발사된 화성-14형이 정상각도로 발사됐을 경우 사거리는 미국 서부까지 닿는 9,000~10,000km가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약 4개월 후인 2017년 11월 29일 북한은 또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15형을 고각발사하고 같은 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였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화성-15형이 정상각도로 발사됐을 경우 13,000~14,000km 사거리가 나와, 미국 서부를 넘어 미국 동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은 화성-15형이 기존 화성-14형보다 최대 고도, 속도 등이 향상됐다며 개량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국 국방부를 비롯한 한미 공식기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고각으로만 발사돼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일단 유지하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역량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북한은 2019년 초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는 고체추진제 기반 단거리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가기 시작하였다.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인 KN-24, 초대형 방사포 KN-25가 잇달아 공개된 것이다. 북한은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을 2019년 5월~8월 사이 4번,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를 2019년 8월 2번, 초대형 방사포 KN-25를 KN-24 발사 이후 발사하기도 하였다. 고체추진제 기반 미사일은 액체추진제 기반 미사일보다 신속성, 운용 능력 측면 등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북한은 2017년 8월 29일, 9월 15일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화성-12형 정상각도 발사를 진행하였다. 2017년 8월, 9월 발사된 화성-12형은 일본 본토를 넘어갔고 각각 2,700km, 3,700km 사거리를 비행했는데, 이는 미국 괌 기지, 일본 열도 전체에 대한 타격능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총비서는 9월 15일 발사를 지켜보며 "화성-12형 전력화가 실현됐다"고 선언하였다. 북한은 이 같은 능력을 바탕으로 2017년 8월 "화성-12형 4발 동시발사로 진행하는 괌 포위사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북한은 2022년 1월 화성-12형 '검수사격'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화성-12형 실전배치·전력화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화성-12형이 실전 운용될 경우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에 대한 북한의 핵 강압력은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88]

이밖에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루었다. 2016년 8월 시험발사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1형은 약 500km를 비행하였다. 미북 정상회담 등 대화·협상 노력이 힘을 잃어가던 2019년 10월 2일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을 높은 고도로 고각발사했고, 실제 사거리는 한층 진일보된 약 2000km일 것으로 추정됐다.

정방호(2022)는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과정을 2009년~2015년 '핵무력 발전기'와 2016~2017년 '핵무력 완성기'로 나누었고 특히 북한이 2016~2017년 '핵무력 완성기'에 핵·미사일실험 등에 있어 이전 시기와 양적·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고 평가하였다. 이 시기 처음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미국 본토에 다다를 것으로 평가 받는 등 단거리, 준중거리, 장거리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커다란 진척을 보였다는 것이다.[89] 미국 본토를 타격 가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완성과 핵탄두 소형화는 미국에게는 '레드라인'으로 해석될 만한 지점이었다.[90]

---

88) 김태현, "북한의 핵 능력과 전략," 『넘어야할 벽, 이루어야 할 꿈: 남북관계의 새로운 도전과 통일 전략의 비전』(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2024. 5. 3), pp. 11-38.

89) 정방호,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 강압외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22).

또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핵무기를 소형경량화, 규격화, 전술무기화하고 초대형 수소탄 개발을 완성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곧 전술핵무기 보유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91] 나아가 김 총비서는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다양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술 핵무기들을 개발한다”고 지시하며 향후 전술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북한의 전술핵무기가 고도화될수록 거리가 가까운 한국・일본 등에 있어서는 심대한 위협이 될 것이었다.

북한의 이러한 핵무력 고도화는 북한이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대응을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배경이 되었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는 북한이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선제타격, 나아가 핵 선제타격 대응을 내세우는 데 있어,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신뢰성을 부여해주었다. 북한의 ‘선언’이 그들의 실제 ‘역량’보다 앞서나간다는 평가도 있지만,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는 북한이 최소한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공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북한이 ‘허세부리기 전략’(bluffing)을 사용했다는 일부 연구가 있다. 구본윤, 박성호(2022)는 북한이 평시에는 ‘확증보복 태세’를 유지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 등 위협이 증대한다고 인식할 때에는 보다 공세적인 ‘비대칭 확전 태세’를 강조하는, 이중노선을 구사했다고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핵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핵 선제사용’ 등을 운운한 것은 ‘허세부리기 전략’(bluffing)이라고 평가하였다.[92] 실제 2016년 이후에도 북한이 상황에 따라 공세적인 입장과 수세적인 입장을 오가며 ‘이중노선’으로 보이는 형태를 나타낸 것은 북한이 발표한 입장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한미연합훈련 등 위

90) 남성욱,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미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전망,”『통일전략』, 제17집 제4호(2017), pp. 55-110.

91) 이호령, “북한 핵 무력 증강과 무력 통일 노선,”『개원 33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 북한의 두 국가론과 민족 분리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2024. 4. 1.), pp. 25-45.

92) 구본윤, 박성호, “김정은 시기 핵전략의 이중성: 확증보복태세와 허세부리기,”『통일연구』, 제26권 제2호(2022), pp. 178-188.

협이 증대한다고 인식할 때 보다 공세적으로 나섰다는 주장도 북한의 입장 발표 시기 등을 미루어볼 때 일면 타당성이 있다.

다만 북한의 전술이 '허세부리기'에 그친다는 이들의 평가는, 북한이 걸어간 또 다른 길이자 커다란 배경인 핵·미사일 고도화를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북한이 내세우는 입장이 내용 없는 선언에 그쳤다면 효과 없는 '허세 부리기'에 머물렀겠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언급한 능력들을 실제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무력 고도화를 진행하였다. 무엇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은 '참수작전' 실행 가능성과 같이 북한에게 있어 심대한 군사 안보적 위협에 대해 북한이 단순히 '허세부리기 전략'(bluffing)만으로 장기간 대응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도 불합리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만약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공세적'으로 전환했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데 그쳤다면 이는 '허세부리기 전략'(bluffing)이라고 평가될 수 있지만, 북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제5장 한미 '참수작전'의 노골화와 대응의 제도화

제1절 '참수작전'의 공개적 강화와 '공세적' 대응의 제도화

1. 한미 '참수작전'의 공개적 강화 실시

잠잠했던 한미 '참수작전' 역량 축적, 간접적인 역량의 시현은 2021년 이후 다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한국 정부 출범 이후 '참수작전'이 한미연합훈련 등을 통해 등장하는 빈도가 다시 높아졌다.

2022년 2월 한미연합 공중훈련이 실시됐다. 훈련에는 이례적으로 MC-130 특수전용 수송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으로 알려졌다. MC-130은 미군 최정예 특수부대 침투에 쓰이는 수송기 중 하나다. 2022년 5월 유사시 '참수작전' 등을 수행하는 한국 특수임무여단이 한국군이 개조한 침투용 수송기 MC-130K 등을 이용해 미국 미주리주 공군기지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93]

특히 윤석열 한국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7월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구급 한미연합연습 정상화, 한미연합야외기동훈련 재개와 함께 한국형 3축체계 확충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참수작전' 용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수전부대의 침투·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등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참수작전' 관련 부대의 훈련 정상화 및 강화 의지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장관은 2028년까지 F-35A 20대 추가 도입한다는 계획을 재확인했고, 현무-Ⅳ(사거리 800㎞) 등 정밀타격이

93) "[단독]韓 참수부대, 美 특수부대와 미본토서 핵시설등 침투 연합훈련," 『문화일보』, 2022년 5월 15일;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515MW063934745838 (검색일: 2024년 1월 21일).

가능한 미사일 보유량을 늘리겠다고 보고하였다.[94]

정부의 의지가 잘 드러난 것은 2022년 8월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였다. 이 훈련은 한미가 5년 만에 진행하는 가장 큰 규모의 연합연습이었다. 군은 2019년 이후 연중 분산해 시행하던 각종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이번에 작전계획에 기반을 둔 훈련 시나리오를 상정해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가 총력전 수행을 연습하는 을지연습도 진행됐는데 한미 연합전력의 군사연습, 정부연습이 함께 실시된 것은 2018년 을지 프리덤 가디언(UFG) 연습 폐지 이후 4년 만이었다.[95] 한미연합훈련에는 이전에 없던 새로운 훈련 내용이 속속 추가됐다. 2022년 7월 미 공군 F-35A 전투기가 (2017년 12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한반도에 공개 배치돼 한국 공군 F-35A와 첫 연합훈련을 실시하였다. 미 공군 F-35A와 한국 공군 F-35A 합동 훈련은 이번이 처음이었다.[96]

2023년에도 한미연합훈련은 이어졌다. 2023년 2월 한미 공군은 한국 스텔스 전투기 F-35A, 미국 스텔스 전투기 F-22, F-35B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서해 상공에서 새해 첫 연합훈련을 진행하였다.[97] 2023년 3월 한미연합의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 연습이 실시됐다. 자유의 방패 연습의 일환으로, 전구급 대규모 야외실기동훈련(FTX)이 부활하였다. 한미는 이를 전사의 방패(WS・워리어실드)라고 명명하였다. 군은 2018년을 끝으로 실시되지 않았던 '독수리훈련'(FE) 규모로 확대 시행한다는 뜻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의 방패의 주요 야외실기동훈련 중 하나인 쌍룡훈련은 2018년 이후 5년 만에 실시돼 한미 해병대, 해군이 대규모 연합상륙훈련을 진행하였다. 2023년 7월 21일~8월 31일 한미는

---

94) "이종섭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사드' 언급 없이 3축 강화"," 『중앙일보』, 2022년 7월 22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8934(검색일: 2024년 1월 21일).

95) "오늘 한미 연합연습 '본연습' 개시…북한 '대응 도발' 가능성 높아져," 『뉴스1』, 2022년 8월 22일; https://www.news1.kr/articles/4779597(검색일: 2024년 1월 20일).

96) "[정래 브리핑] 한·미-미·일, 김정은 참수작전 F-35 공조...북한 '핵전쟁' 언급," 『아주경제』, 2022년 7월 11일; https://www.ajunews.com/view/20220711110134853(검색일: 2024년 1월 20일).

97) "한미 서해서 '스텔스 폭격훈련' …김정은에 참수작전 경고," 『서울경제』, 2023년 2월 2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LFIGVMX(검색일: 2024년 1월 21일).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습을 실시하였다. 한미는 16~18일 사전연습인 위기관리연습(CMX)을, 21~25일 1부 연습에서는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통합해 국가총력전 수행능력을 점검하였다.

'참수작전' 관련 부대 훈련도 속속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2021년 9월 23일 주한 미 특수전 사령부는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13일 미 공군 제320특수작전대대 대원들이 캠프 험프리스에서 작전 임무를 완벽히 수행했다며 "티크 나이프 훈련(Teak Knife)에서는 특수전술 장교와 합동최종공격통제관(JTAC)들이 인도-태평양 전역의 특수 작전을 위한 기술을 습득했다"고 밝혔다. 미군은 2017년 이후 '티크 나이프' 훈련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 미군은 훈련 사진도 공개하였다. 한국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에 투입된 C-130J 수송기, MH-60 헬기, 특수전 병력은 미 본토 해군 특수전사령부, 일본의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건너온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최종공격통제관(JTAC)는 전투기의 정밀유도폭격 임무 등을 맡으며 2011년 5월 오사마 빈 라덴 '참수작전'에 특수전 요원들과 투입된 바 있다. 2022년 2월 7일 주한 미 특수전 사령부는 또다시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11월, 12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Navy SEAL) 대원들과 혹한기, 해상・지상영역 준비태세 훈련 기회를 얻었다며 관련 사진 2장을 공개하였다. 미 네이비실과 한국 해군 특수부대(유디티실·UDT/SEAL) 등 한미 양국 특수부대 대원들은 국내 모처에서 후방 침투와 적 핵심 기지 타격 임무를 숙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9월 주한 미 특수전 사령부는 페이스북에 '티크 나이프'(Teak Knife) 훈련이 한국 평택 험브리스 미군기지 비행장에서 진행됐다며 관련 장면을 공개하였다. 훈련에는 미 공군 제353특수작전비행단, 제1특수작전비행대대, 제320특수전술비행대대, 한국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 제259특수임무대대, 특수임무대가 참여하였다.[98] 2023년 2월~3월 한미는 특수작전훈련인 '티크 나이프'(Teak

98) "北미사일 도발에 주한美특전사 '티크 나이프' 훈련 장면 공개,"『연합뉴스』, 2022년9월 30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0930052000504?input=1195m(검색일: 2024년 1월 28일).

Knife)와 '플래시 나이프'(Flash Knife)를 실시하였다. 티크 나이프는 공중침투, 플래시 나이프는 해상침투 훈련으로, 모두 유사시 '참수작전'이 포함된다.[99] 플래시 나이프는 해군 특수전 요원들이 적진으로 침투해 요인 제거,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차단 등에 숙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3월 2일 합참은 한미가 2월 초부터 한국 평택 캠프 험프리스, 오산기지 등에서 '티크 나이프'(Teak Knife) 훈련을 실시 중이며 훈련에는 AC-130J가 최초로 한반도에 전개, 참가했다고 밝혔다. AC-130J의 한반도 전개는 이번이 처음이다.[100] 이 훈련에 한국 특전사, 주한 미 특전사, 미 공군 특수작전비행단 등이 참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101] 2023년 12월 주한 미군사령부는 페이스북을 통해 주한 미 특수전 사령부의 그린베레(Green Beret)와 네이비실(Navy SEAL)이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등과의 연합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102] 그린베레는 미 육군 특수부대의 7개 특수전단 중 하나인 미 1특수전단을 뜻하며 태평양, 동남아 지역을 관할한다.

'참수작전' 관련 무기 전개 및 도입도 이어졌다. 2022년 '킬러 드론'으로 불리는 이스라엘제 자폭 드론 '로템(Rotem)-L'이 '참수작전' 등을 수행하는 특수임무여단에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103] 2022년 12월에는 2023년 1월부터 '로템(Rotem)-L'이 실질적 운용에 들어간다는 보도가 나왔다.[104] 로템-L은

---

99) "韓美英 해병 '쌍룡훈련'서 손발 맞춘다…해상침투 '참수작전'도 실시," 『문화일보』, 2023년 3월 17일;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3031701039930114002(검색일: 2024년 1월 21일).

100) "한미 연합 특수전 훈련 공개…합참의장, 현장 점검," 『KBS』, 2023년 3월 2일;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16914&ref=A(검색일: 2024년 1월 21일).

101) "[단독]한미, 최신예 美 AC-130J 건십 첫 한반도 전개해 대북 참수훈련 실시," 『동아일보』, 2023년 2월 28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228/118107508/1(검색일: 2024년 1월 21일).

102) "한미 특수부대, 최근 2주간 연합훈련 실시," 『뉴스1』, 2023년 12월 18일; https://www.news1.kr/articles/5265069(검색일: 2024년 2월 3일).

103) "고속 주행 중인 차에 '쾅'… 참수부대가 도입중인 킬러 드론의 위력," 『조선일보』, 2022년 11월 3일;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2/11/03/X6ZNDCBNMVHQDLZZV7IFKJXRM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검색일: 2024년 1월 27일).

이스라엘 IAI사 제품이며 작전거리 10km, 비행시간 최대 45분, 탄두(무게 1.2 kg)는 약 수류탄 2발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2022년 10월 26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3일 일본 해상자위대 가노야 항공기지에서 미군 319원정정찰대대 재출범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해당 부대는 2020년 솔레이마니 '참수작전' 등에 동원된 MQ-9를 운용한다. MQ-9 인도태평양 지역 배치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105]

2022년 11월 미국의 AC-130J 고스트라이더가 주일미군기지에 전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AC-130J 고스트라이더는 C-130J 수퍼 허큘리스 수송기를 개조한 건십(gunship)이다. 첨단항법장비, 은밀침투기능 등이 보강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부대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AC-130기는 지상작전 중인 특수부대에 화력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유사시 한반도에 투입돼 특수전부대의 지상활동을 지원하는 역할 등을 겸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106] 2023년 3월 3일 2020년 솔레이마니 '참수작전' 등에 동원된 MQ-9,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일대로 전개돼 한국 공군과 연합 공중훈련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MQ-9의 한반도 전개는 이번이 처음이다.[107]

2023년 6월에는 미 해군의 순항미사일 핵추진 잠수함(SSGN) '미시간함'이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하였다. 미 핵추진 잠수함 방한은 2017년 10월 이후 5년 8개월 만이다. 미시간함은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등 특수부대원 66명을 태

104) "軍, 정밀타격용 신형 자폭드론 본격 운용…'참수부대' 등 배치," 『연합뉴스』, 2022년 12월 30일; https://www.yna.co.kr/view/AKR20221229124100504?input=1195m(검색일: 2024년 1월 21일).

105) "美 '하늘의 암살자' MQ-9 일본 배치… '세계 최강' 무인기," 『뉴스1』, 2022년 10월 27일; https://www.news1.kr/articles/4845651(검색일: 2024년 1월 21일).

106) "김정은에 '포탄비' 경고... 美, AC-130J 고스트라이더 日 배치," 『조선일보』, 2022년 11월 10일;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11/10/NFUJJDSGIJEDZHYF4S5WBRKE5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검색일: 2024년 1월 20일).

107) "[단독]한·미, 연합훈련때 北 지도부 축출 및 주민 지원 훈련한다," 『동아일보』, 2023년 3월 3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303/118162699/1(검색일: 2024년 1월 21일).

울 수 있으며 특히 특수부대원들은 특수 잠수정 ASDS를 이용해 적 해안에 은밀한 침투가 가능하다고 알려졌다.[108] 과거 한미 특수부대원이 오하이오급 핵추진 잠수함에 탑승해 침투훈련을 한 사례가 수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109]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들어 한국군 '참수작전' 부대인 '특수임무여단'의 본격적인 훈련도 재개됐다. 2022년 5월 '특수임무여단'이 한국군이 개조한 침투용 수송기 MC-130K(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C-130를 특수침투용으로 개조) 등을 이용해 미국 미주리주 공군기지에서 한미연합훈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110] 2022년 6월~7월에는 한국 '특수임무여단'과 미국 특수전사령부(제1특전단) 병력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포트어윈 국립훈련센터(NTC)에서 훈련을 진행하였다. 한미 양국 군은 연합작전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2020년부터 NTC에서 연합훈련을 해왔지만[111], '참수작전'을 수행하는 한미 특수부대 대원이 미국 현지에서 함께 훈련한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112] 2023년 1월 육군은 유사시 '참수작전' 등을 수행하는 특전사 특수임무여단의 동계 특수전 훈련 영상을 공개하였다.[113] '참수작전'이 아닌 다른 목적의 훈련 가능성도 일부 열려있는 다른 특수부대와 달리, '특수임무여단' 훈련의 주된 목적은 '참수작전'이다. '특수임무여단'

108) 특수 잠수정 ASDS은 미시간함 격납고에 2척이 실려있다. "토마호크 강철비 퍼붓는 美핵잠 부산 왔다," 『조선일보』, 2023년 6월 17일;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6/17/FV6LGJTHDJAVNHO3YBRIYB5P4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검색일: 2024년 2월 3일).

109) "미 SSGN 미시건함, 연합 특수전훈련 투입… 북한 초토화 연습하나," 『뉴스1』, 2023년 6월 17일; https://www.news1.kr/articles/5079939(검색일: 2024년 2월 3일).

110) "[단독]韓 참수부대, 美 특수부대와 미본토서 핵시설등 침투 연합훈련," 『문화일보』, 2022년 5월 15일; https://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515MW063934745838 (검색일: 2024년 1월 21일).

111) "육군 특공부대 150명, 미국서 1개월 간 연합훈련," 『뉴스1』, 2022년 8월 7일; https://www.news1.kr/articles/4765553(검색일: 2024년 1월 21일).

112) "[단독] 주한미특수전사령관 "실전 훈련 통해서만 '목숨 거는 경험' 할 수 있어," 『조선일보』, 2022년 7월 9일;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2/07/09/QPGK3ZYXLFFWHMQDWDLXEVNWJE/(검색일: 2024년 1월 20일).

113) "빈라덴 잡은 4000만원 투시경 달고...특전사 참수훈련 이례적 공개," 『조선일보』, 2023년 1월 24일;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3/01/24/DX2YI23ENBCBPGOIG7ZHM53IP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검색일: 2024년 1월 20일).

훈련 재개는 한국이 다시 '참수작전' 역량 축적에 나섰다는 근거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다. '특수임무여단'의 존재는 논문 작성 시점인 2024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이 시기 '참수작전' 관련 한국 정부 관계자의 발언 및 움직임을 살펴보면, 2022년 7월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참수작전'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특수전부대의 침투·타격 능력을 강화하는 등 대량응징보복(KMPR)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11월 이종섭 장관은 한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최초로 미국 정보기관인 국가지리정보국(NGA)를 방문하였다. 미 워싱턴 DC 인근에 위치한 NGA는 지리정보(GEOINT) 전문 정보기관으로 정찰위성·무인기·정찰기가 촬영한 영상자료를 분석해 정보를 생산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양욱은 "(과거 숨어있던)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낸 능력으로 북한 지휘부 위치를 잡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114] 2023년 12월 18일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은 한국의 한 방송에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참수작전 훈련이나 전략자산 추가전개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참수'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두 가지 다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10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특수전 전력 강화를 주문하였다. 윤 대통령은 해군 특수전전단(UDT/SEAL)을 찾아 "전세계에서는 전면전보다 비대칭 특수전에서 안보위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전 전력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였다.

2. 제도화된 북한의 '공세적' 대응

이 시기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

114) "이종섭 국방, '하늘의 CIA' NGA 방문…도발원점 다 보여줘," 『중앙일보』, 2022년11월 3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14596(검색일: 2024년 1월 28일).

는 것은 2022년 9월 8일 ‘핵무력 정책’ 법령 채택, 2023년 9월 28일 ‘핵무력 정책’ 헌법 명시다. 북한은 2022년 9월 8일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며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핵 선제공격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세적’ 대응을 제도화하였다. 나아가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 1년 후인 9월 27일 핵무력정책법을 헌법에 명시하며, 제도화로 이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나아갔다. 이는 북한이 1972년 12월 사회주의 헌법을 채택한 이후 실행한 10번째 헌법 개정이었다.

2022년 9월 8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을 법령으로 채택하였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22년 9월 9일 공개한 ‘핵무력 정책법’에는 선제 핵공격이 가능한 5가지의 상황 중 ‘참수작전’과 관련해 ‘국가 지도부나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를 대상으로 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6조 ‘핵무기의 사용조건’에 1.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국가지도부나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를 통해 ‘참수작전’ 등 적성국의 공격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북한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선제적인 핵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또 제3조 3항은 “국가핵무력에 대한 지휘통제체계가 적대세력의 공격으로 위험에 처하는 경우 사전에 결정된 작전방안에 따라 도발원점과 지휘부를 비롯한 적대세력을 괴멸시키기 위한 핵타격이 자동적으로 즉시에 단행된다.”고 밝히면서, ‘참수작전’으로 인해 김정은 총비서를 비롯한 지휘통제체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즉각적으로 핵무기가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은 러시아의 핵 교리 문서와 상당한 유사성을 띄면서도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다. 차별화되는 지점 중 하나는 바로 '참수작전'에 대한 대응이다. 황일도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령 작성에 있어 러시아의 2020년 6월 대통령 명령 '핵 억제 영역의 러시아 국가정책 기본 원칙에 대하여'('러시아 핵억제 기본원칙')를 주요 항목, 분량 등 내용 및 형식에 있어 참고한 것으로 분석된다.[115] 러시아는 '핵억제 기본원칙' 제3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조건의 제19조에서 핵무기 사용 조건을 정리했는데, 1. 적국의 핵무기 발사에 임박한 징후와 자료 식별 2. 러시아와 동맹국에 대한 대량살상무기(WMD) 사용 징후 포착 3. 러시아 핵무기 지휘 및 통제 시설에 대한 공격 임박 4. 적국의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의 현행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가 해당한다.

【표 5-1】 핵무력 정책법, 러시아 핵억제 기본원칙 핵 사용조건

	북한 핵무력 정책법 (2022)	러시아 핵억제 기본원칙 (2020)
1	공화국에 대한 핵무기 또는 기타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국의 핵무기 발사에 임박한 징후와 자료 식별
2	국가지도부나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러시아와 동맹국에 대한 대량살상무기(WMD) 사용 징후 포착
3	국가의 중요전략적 대상들에 대한 치명적인 군사적 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러시아 핵무기 지휘 및 통제 시설에 대한 공격 임박
4	유사시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를 막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작전상 필요가 불가피하게 제기되는 경우	적국의 재래식 무기가 러시아의 현행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
5	기타 국가의 존립과 인민의 생명안전에 파국적인 위기를 초래하는 사태가 발생해 핵무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 출처: 연구자가 직접 작성.

115) 황일도, "북한의 장기 핵 전력구조 전망: 이론적 해석 및 선행사례." 『정책연구시리즈』, 제5권(2023), pp. 1-69.

북한의 핵무력 정책법과 러시아의 핵억제 기본억제가 명시한 핵무기 사용조건을 비교해보면, 북한의 경우 '국가지도부에 대한 적대세력의 핵 및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고민이 반영된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만약 북한이 핵무력정책법을 제정하고 법을 헌법에 명시한 숨은 의도가 향후 있을 미국과의 핵 협상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얻어내고자 하는 데 있다고, 즉 군사·안보적 동기보다는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면, 굳이 '참수작전'과 관련한 내용은 새롭게 추가되지 않았어도 큰 무리가 없었다. 북한이 독자적으로 2번째 핵무기 사용조건을 작성한 것은 어디까지나 한미 '참수작전' 억제에 제1의 목적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시기 '참수작전'과 관련 조선중앙통신에 발표된 기사 등을 살펴보면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공세적' 대응, '핵 선제공격'을 내세우는 입장은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2022년 9월 7일 '핵무력 정책' 법령 채택 후 약 50일 후인 2022년 10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규모상륙훈련, 참수작전과 같은 상대방의 령역과 종심을 점령하기 위한 침략전쟁연습을 벌려놓고있는 미국이 우리의 자위적인 군사적대응에 대하여 정세를 긴장시킨다고 비난하는것은 철저히 언어도단이며 적반하장"이라고 밝혔다. 기사에는 "대등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것을 각오해야", "보다 강화된 다음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는 추상적 표현이 등장하지만 구체적인 군사적 대응 방법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다.[116]

2023년 3월 17일 조선중앙통신은 노동신문에 실린 논평원 글이라며 《폭발전야에 이른 조선반도정세의 근원을 론함》 전문을 실었다. 글은 "조선반도에 대한 미핵전략자산들의 항시적인 전개와 정권종말, 참수작전, 평양점령을 목표로 한 전쟁각본들에 따라 감행되는 특수부대의 강하침투훈련과 기습상륙 및 진

1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담화," 2022년 10월 31일.

격훈련 같은것들이 방어적인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핵무력은 결코 광고하기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니”라며 “국가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용될수 있으며 위험하게 확전되는 충돌이 일어난다면 전략적기도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선제적으로 사용할수 있는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법령에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가해지는 외부의 군사적위협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각이한 정황에서의 핵무기사용원칙과 조건들이 명백히 규정되여있다.”고 강조하였다.[117] 북한은 해당 글의 영어 번역본을 함께 발표했는데, 이는 미국 등을 향해 핵무력정책법 제정을 통해 제시한 가장 높은 수위의 ‘공세적’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4월 2일 조선중앙통신은 《전쟁광들의 망동에는 대가가 따를것이다》 글에서 “미국과 괴뢰들이...평양점령과 참수작전을 공공연히 뇌까리면서 그것을 실전에 옮기기 위한 훈련에 열을 올리고있는것은 우리에 대한 적대행위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밝혔다. 또 “핵을 두려워할줄 모르고 날뛰는 자들에게 만약 전쟁억제력이 효력이 없다면 우리의 핵이 그 다음은 어떻게 쓰이겠는가 하는것이야 너무도 명백할것이다.”며 ‘핵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였다.[118]

6월 26일 조선중앙통신은 《20세기 조선침략전쟁의 도발자 미국은 오늘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원흉으로 남아있다》라는 제목의 외무성 미국연구소 연구보고서를 실었다. 외무성 미국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합동군사연습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작전계획 등이 모두 참수작전, 족집게식타격, 평양점령과 같은 침략적이고 도발적인 내용들을 골자로 한 극악무도한 핵전쟁각본들이라는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라고 밝혔다. “1990년대부터 수십년동안 비공개로 감행해온 참수작전으로 불리우는 티크 나이프 련합특수작전훈련을 전격공개하면서”라는 대목에서는, 북한이 ‘티크 나이프’ 훈련을 참수작전으로 인식하고 있

117) “폭발전야에 이른 조선반도정세의 근원을 론함,” 『조선중앙통신』, 2023년 3월 17일.
118) “전쟁광들의 망동에는 대가가 따를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23년 4월 2일.

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글에서는 “미국의 우려스러운 군사적적대행위들에 대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한 강위력한 자위적핵억제력”이라는 대목 등에서 핵의 억제력을 강조하고, “군사적도발책동에 계속 매여달릴수록 그에 정비례하여 미본토의 안보위기가 더욱 증대되게 되여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라는 대목 등에서 보복력을 강조할 뿐, 선제공격, 핵 선제공격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119] 해당 외무성 미국연구소 보고서의 특징적인 부분은 ‘작전계획 5015’에 대해, ‘참수작전, 족집게식타격, 평양점령’을 핵심으로 한 것이라는 자신들만의 해석을 드러낸 부분이다. 이는 북한이 작계 5015을 얼마나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는지 드러내는 일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2023년 8월 22일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공화국무력은 자비를 모른다》는 논평을 게시하였다. 논평은 “그 누구에 대한 점령, 격멸, 참수, 초토화 등의 호전적수사로 매닥질되고 사상 처음,력대 최대로 규모와 내용의 전례를 갈아치우며 벌어지는 이번 전쟁시연이 우리 공화국을 목표로 하고있다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며 “조성된 정세는 우리 군대의 주동적이고 공세적이며 압도적인 전쟁대응을 요구하고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적대세력에 대한 징벌의지는 격발의 순간을 기다리고있다.”는 대목 등에서 보복력을 강조하는 표현만 등장할 뿐, 선제공격, 핵 선제공격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120]

이와 함께 이 시기 김정은 총비서의 행보에 대해 살펴보면, 이전보다 확연히 ‘공세적’으로 나서는 모습, 특히 한국에 대해 ‘공세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확인된다. 2023년 4월 10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쟁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보도에서 북한 매체는 김정은 총비서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대형 한국지도 위의 평택 주한미군기지를 손가락에서 가리키며 발언하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하

119) “20세기 조선침략전쟁의 도발자 미국은 오늘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원흉으로 남아있다,”『조선중앙통신』, 2023년 6월 26일.

120) “우리 공화국무력은 자비를 모른다,”『조선중앙통신』, 2023년 8월 22일.

였다.

2023년 12월 말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남북을 '적대적인 교전국 관계'로 규정하며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하였다. 동시에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통일', '동족' 등 기존 남북 간 공통의 가치로 여겨졌던 개념을 폐기할 것을 지시하였다.

제2절 북한 핵무력의 고도화와 제도화된 '공세적' 대응

마지막 시기, 즉 북한의 제도화된 '공세적' 대응 시기 배경을 살펴보면, 북한은 2022년 9월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하기 앞서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전략무기 5대 핵심 과업을 제시했는데, 이는 극초음속 미사일, 다탄두 유도 기술, 고체 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 잠수함, 정찰위성 등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고재홍(2023)은 북한이 2018년 '핵무력 완성' 선언 이후 2021년 '핵무력 강화 지속'으로 다시 입장을 변경했다고 평가하였다. 또 고재홍은 '5개년 계획'은 곧 기존 전략핵 개발뿐 아니라 전술핵 고도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북한의 전술핵 무기 고도화란 곧 한국, 일본을 위협하기 위한 것이었다.[121]

한국 국방부의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2021년 초부터 영변 핵단지 내 플루토늄 생산 관련 시설을 재가동하였다. 북한은 또 2022년 3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4년 가까이 유지해온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를 파기하였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2022년 4월 25일 인민군 창건일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최대한 빠르게 발전시킬 것을

121) 고재홍, 『김정은 정권의 핵능력 고도화와 대남정책의 변화』(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pp. 9-74.

강조하는 등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야망을 숨기지 않았다.

북한은 2022년 9월 8일 '핵무력 정책법' 제정 이후에도, 2022년 9월 25일, 9월 28일, 9월 29일, 10월 1일 전술핵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잇달아 실시했고, 10월 4일 신형 지대지 중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훈련, 10월 6일 전술탄도미사일 명중타격 훈련, 10월 9일 초대형방사포사격훈련을 실행하였다.

북한은 2022년 11월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는데, 이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1,000km, 고도 약 6,100km, 속도는 약 마하 22(음속 22배)로 탐지됐다. 약 1년 후인 2023년 11월 "세계적인 핵 강국, 최강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의 위용을 만천한에 떨친 날"이라며 이 날을 '미사일 공업절'로 지정하였다.

2023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지속됐다. 1월 1일 초대형 방사포, KN-25 1발을 발사했고, 2023년 2월 18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2월 20일 KN-25 2발을, 2월 23일 핵탄두 탑재 가능 주장 전략순항미사일 4발을, 3월 9일 KN-23 파생형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 6발을 발사했고, 3월 12일 잠수함 발사 전략순항미사일(SLCM) 2발을 첫 발사하였다. 북한은 이어 3월 14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추정 2발을, 3월 16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1발을 발사했고, 3월 19일 전술핵 탑재 가능 주장 KN-23 1발 공중폭발 '핵반격가상종합 전술훈련'을 실시하였다. 또 3월 22일 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4발을, 3월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 '해일-1'·장거리 전략순항미사일 '화살-1' '화살-2' 시험발사를 하였다. 북한은 3월 25~27일 '해일-1' 기폭시험을 실행했고 3월 27일 KN-23 추정 2발 시험발사, 4월 4~7일 '해일-2' 기폭시험을 실시하였다. 2023년 4월 13일 북한은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하였다. 고체연료 화성-18형은 핵탄두를 탑재한 사거리 1만~1만3000km급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6월 15일 KN-23 추정 2발을, 5월 31일 북한은 천리마 1형을, 7월 13일 화성-18형 시험발사를 하였다. 북한은 8월 21일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하였다.

특히 북한은 2023년 3월 28일 김정은 총비서가 전날 핵무기 병기화사업을

지도했다고 보도하며 최소 10기 이상의 전술핵탄두 '화산-31'을 공개하였다. 북한은 전술핵탄두와 함께 여러 투발 수단 도면과 실물도 공개했는데, 이는 ' 화산-31'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 KN-24, 초대형 방사포 KN-25, 순항미사일 화살-1·2형, 핵무인잠수정 해일 등 다양한 투발 수단에 장착 가능한 표준화된 전술핵탄두라는 암시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화산-31'이 개발 중인 상황인지, 완성 단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북한이 다양한 투발 수단 개발과 표준화된 전술핵탄두 생산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국방부는 2022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였다. 2022 국방백서는 또 북한이 짧은 기간 동안 다양한 형태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을 개발했다며, 장거리 지대지 순항미사일 개발 등이 완료될 경우 한국의 위협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제화 이후', 전술핵 탑재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특히 2022년 11월 2일에는 의도적으로 미사일을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발사하는 등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였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전략무기 개발 과업 완성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하였다.[122]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 수와 핵물질 추정치도 높아지는 추세를 이어갔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2023년 6월 발표한 연감(SIPRI Yearbook)에서 북한이 1월 기준 핵탄두를 30기 보유, 전년보다 5기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며, 50~70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핵분열 물질을 생산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는 북한이 추가 7차 핵실험을 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핵무기를 국가안보 전략 핵심요소로 우선시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북한 핵탄수 수와 핵물질 추정치에 대해 2022 국방백서는 "플루토늄 70여kg과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만 밝혔다.)

122) 한국 국방부, 『2022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22), p. 23.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북한이 다양한 전술핵 타격훈련을 실시하며 유사시 한국을 군사적 목표로 한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2022년 10월 '전술핵운용부대'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면서 발사훈련 표적이 한국 작전지대 안 비행장들이라고 명시하였다. 북한이 '전술핵운용부대'를 언급한 것은 2022년 10월이 처음이었다. 이에 대해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 등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실제 전술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 핵무기를 소형화하려면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123] 일단 이러한 북한의 전술핵 훈련은 한국에 대한 핵공격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124] 2023년 8월 10일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전날 중앙군사위 제8기 제7차 확대회의에서 한국의 육해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지역, 서울 일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모습이 공개하기도 하였다. 또 2023년 8월 31일 북한은 전군지휘훈련 사실과 함께 김정은 총비서가 훈련 목표를 '남반구 전역 점령'이라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국 점령 계획이 포함된 지휘소훈련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북한은 KN-24 2발 전술핵 공중폭발을 통해 한국 지휘거점 등을 초토화하는 전술핵타격훈련을 했다고 주장하였다. 이렇듯 북한은 2023년 12월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기 전부터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이용해 군사공격을 강행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은 한미 동맹 중 최소한 한국에 대해서라면 '핵 인질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실제 북한이 핵무력 고도화를 재개하고 투발수단 다양화 등 성과를 축적해 나가며 북한의 핵 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브루스

123) 하이노넨 "북, 전술핵탄두 개발용 핵실험할 것", 『RFA』, 2022년 10월 10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tacticalnuclear-10102022162608.html(검색일: 2024년 1월 21일).

124) "전문가들 "북한 전술핵운용부대 훈련, 대남 핵 공격 위협… 실전 '연속발사' 능력은 부족", 『VOA』, 2022년 10월 10일; https://www.voakorea.com/a/6784171.html(검색일: 2024년 1월 21일).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2022년 10월 1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성공은 “한미, 미일 동맹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약화시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125]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2023년 1월 북한이 고체 연료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미사일 궤도변형 능력까지 갖춰 요격이 어렵다며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가 이미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진단하였다.[126] 고재홍은 북한 전술미사일이 한국, 일본 주요 군사시설 등을 기습적으로 공격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127]

북한이 추구하는 한국 ‘핵 인질화’의 여러 가지 목표 중에는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맞대응적 성격이 포함된다고 분석할 수 있다. 한미가 ‘참수작전’을 통해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을 목표로 하고, 한미 ‘참수작전’의 존재와 관련 훈련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 강압·억제 효과를 노리듯, 북한 역시 공공연하게 한국이 핵을 포함한 군사적 목표라고 밝히고 관련 훈련을 진행하며 한국 ‘핵 인질화’로 대응하는 것이다. 한국 지도부나 군 기지, 나아가 한국 국민을 향한 북한 핵 미사일 공격에 대한 성공적인 요격 가능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한미는 ‘참수작전’에 나서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진다. 북한은 한국 ‘핵 인질화’로 인해 자신들이 보유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 중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억제 효과 또한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대응이, 처음 ‘수세적’ 대응에서 ‘공세적’ 대응으로 전환되고, 나아가 제도화된 ‘공세적’ 대응으로 나아가기까지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5-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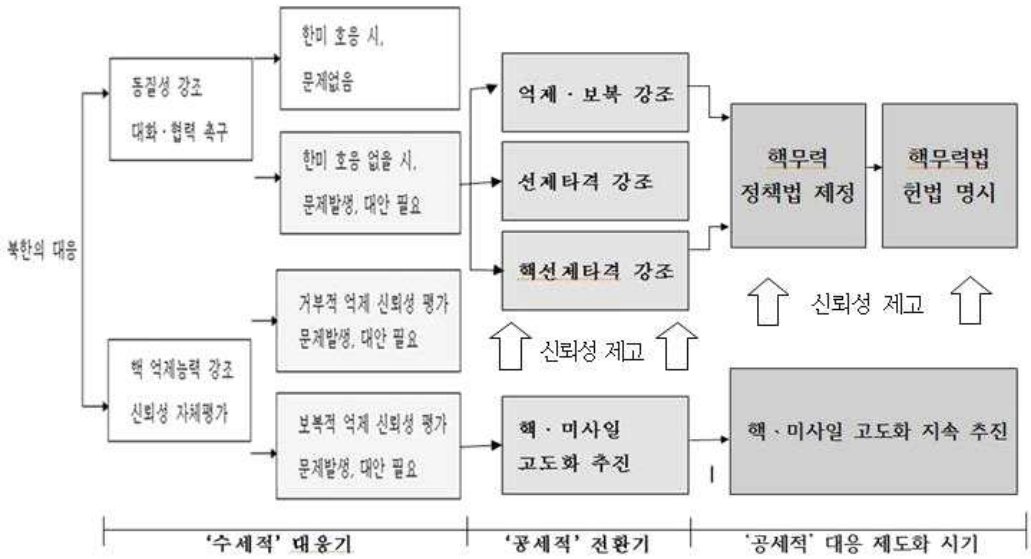
---

125) “북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동북아 위기 촉발,” 『RFA』, 2022년 10월 17일; https://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10172022161705.html(검색일: 2024년 1월 21일).

126) [청론직설] “자체 핵무장, 필연적 요구…핵물질 없으면 100년 걸려도 불가능,” 『서울경제』, 2023년 01월 18일;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IUX2EG9(검색일: 2024년 1월 21일).

127) 고재홍, 『김정은 정권의 핵능력 고도화와 대남정책의 변화』, p. 62.

【그림 5-1】 북한의 '참수작전' 대응의 변화



* 출처: 연구자가 직접 작성.

본 연구를 통해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공세적' 전환을 넘어 '공세적' 대응을 제도화하기에 이르렀고, 이 같은 배경에 핵·미사일 고도화가 함께 했다고 설명하였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는 북한이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보다 '공세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제도화된 '공세적' 대응으로 나서는 데 있어,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북한의 '공세적' 대응 능력·의지에 대한 일정 부분의 신뢰성을 제공하였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추진이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보다 '공세적' 대응 태세를 갖추도록 하는 데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제6장 결 론

참수작전'이 군사전략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을 조사, 연구한 사례가 없었다. 본 논문은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은 어떻게 변화했으며,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 어떻게 변화했으며, 대응이 점차 '공세적'으로 변화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015년 6월 한미 '참수작전'을 포함한 작전계획 5015가 발효되고 2015년 8월 조상호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의 '참수작전' 공식 언급 등이 있었지만, 본격적인 '참수작전' 훈련 시행을 앞두고 북한의 초기 입장은 다소 관성적인 흐름을 따랐다. 북한 매체는 김정은 총비서가 2015년 신년사에서 밝힌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고,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자는 입장을 이어나가며, '민족', '동족', '겨레', '통일' 등 공통의 가치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시기 북한의 가장 높은 수위의 입장 표명은 핵 억제력 강조였으며, 이는 2013년 2월 12일 제정한 '자위적 핵보유법'에서 밝힌 바 있는 억제·보복을 위한 핵무기 보유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대응이 상대의 선의에 의존해, 최선의 시나리오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경우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후 북한은 2015년 6월 한미 '참수작전'을 포함한 작전계획 5015가 발효된 지 약 6개월 만에,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대응을 보다 '공세적'으로 전환하였다. 북한은 2월 23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을 통해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선제공격으로 응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 제기했고, 2016년 3월 7일 국방위 성명을 통해서는 이보다 높은 수위이자 가장 높은 '공세적' 대응 수위, '핵 선제공격'으로 '참수작전'에 응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제기하였

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은 '공세적' 입장 전환에 대한 부분적인 신뢰성을 부여하였다. 북한은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을 진행한 데 이어 같은해 9월 9일 5차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이듬해인 2017년 9월에는 6차 핵실험을 실시하였다. 북한이 2년간 3번의 핵 실험을 진행한 것은 2016년~2017년 시기가 유일하다. 북한이 1년간 핵실험을 2번 감행한 것 또한 2016년이 유일하다.

북한이 '핵·미사일 고도화' 추진에 속도를 내기 시작된 시기와, 북한의 '참수작전'에 대한 대응이 '공세적'으로 전환된 시기가 겹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북한 발표를 살펴보면, 이것은 특정한 목표를 가진 의도된 행위들이었다. 2016년 4월 30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을 보면 "적들이 감히 우리의 최고수뇌부까지 겨냥하며 피눈이 되어 덤벼드는 조건에서 이를 제압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할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것"이라며 핵·미사일 고도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나타난다. 2017년 2월 12일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기념보고서》기사에 따르면 한미연합연습의 성격·내용이 "평양점령, 정밀타격, 참수작전 등으로 침략성이 더욱 노골화"되었지만 "미국이...감히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들과 다종다양한 운반수단들을 다 갖추고 미국본토와 태평양작전지대에 전개된 침략무력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는 우리 공화국의 강위력한 핵억제력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이 대목은 북한이 핵 고도화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은연중 밝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른다면 북한은 "소형화, 표준화, 규격화된 다종의 핵탄을 대량생산"하고 "다종다양한 운반수단들을 다 갖추고 미국본토" 등에 핵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면 '참수작전'을 비롯한 한미의 도발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기대가 실현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으며 아직도 개발이 진행 중인 것으로 평가되지만, 해당 내용들은 적어도 북한의 속내와 장기적 목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 중요한 점은 2016년 3월 16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법에는 나라의 최고존엄이 위협당하는 경우 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나라들과 대상들은 핵타격수단들을 포함한 모든 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선제소멸하게 규제되여있다.”는 주장이 담긴 것이다. 이 주장과 다르게 당시 북한은 핵의 억제·보복적 역할에 초점을 맞춘 ‘핵보유법’만 제정한 상태였다. 2016년 3월 16일 《정부,정당,단체 연합성명》에 담긴 ‘참수작전’ 위협 시 ‘핵 선제타격’ 주장은, 약 6년 후인 2022년 9월 채택되는 핵무력 정책 제3조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지휘부가 위험에 처하면 자동적으로 핵타격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원형이 등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 입장은 이후 억제·보복, 선제공격, 핵 선제공격 등으로 번갈아가며 나타났다. 북한의 대응은 2018년 협상 분위기가 나타나고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되자 ‘수세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이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대화·협력 분위기 형성 등에 대해 호응하는 성격이며 ‘참수작전’ 위협에 대한 북한의 근본적 변화로 볼 수는 없다.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미국 정부 출범,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한국 정부 출범 이후 ‘참수작전’이 한미연합훈련 등을 통해 등장하는 빈도가 다시 높아졌다. 북한은 2022년 9월 8일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며 한미 ‘참수작전’에 대해 핵 선제공격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세적’ 대응을 제도화하였다. ‘핵무력 정책법’은 6조 ‘핵무기의 사용조건’에서 선제 핵공격이 가능한 5가지의 상황 중 ‘국가 지도부나 국가 핵무력 지휘기구를 대상으로 한 적대세력의 핵 또는 비핵공격이 감행됐거나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제3조 3항을 통해 ‘참수작전’으로 인해 김정은 총비서를 비롯한 지휘통제체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즉각적으로 핵무기가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북한의 핵무력정책법은 기 작성된 러시아의 핵 교리 문서(2020)와 상당한 유사성을 띄면서도 차별화되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참수작전’에 대해 ‘핵 선제공격’이 가능하다고 밝힌 부분이다. 러시아 핵억제 기본원칙에는 해당 내용이 없다. 이는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오랜 고민이 반영된 것임을 짐작하게 한

다. 북한은 핵무력 정책 법령을 채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약 1년 후인 9월 27일 핵무력정책법을 헌법에 명시하며, 제도화로 이행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나아갔다. '핵무력정책법', 나아가 '헌법' 반영으로 인해 마침내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명시적인 대응은 '핵 선제공격'으로 고정화됐다.

북한이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공세적' 대응을 제도화한 기간 전후로도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는 지속됐으며,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 전략무기 5대 핵심 과업을 제시했고 관련 실험을 꾸준히 이어나갔다. 북한은 다양한 형태의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고 특히 2023년 3월에는 다양한 투발수단에 탑재 가능한 표준화된 전술핵탄두임을 암시하며 '화산-31'을 공개하였다.

특히 북한은 이 시기 다양한 전술핵 타격훈련을 실시하며 유사시 한국을 군사적 타겟으로 한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는 한미 동맹 중 최소한 한국에 대해서라면 '핵 인질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이 시기 들어 북한의 핵 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추구하는 한국 '핵 인질화'의 여러 가지 목표 중에는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맞대응적 성격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한국 '핵 인질화'로 인해 자신들이 보유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 중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억제 효과 또한 기대했을 가능성이 높다.

본 논문의 한계는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있어, 북한 내부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점, 한미 '참수작전' 관련 간접적 정보에 주로 의존해야 했던 정보접근의 한계 등이 있다.

본 논문은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조사·확인한 연구라는 점에 1차적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이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 관련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논문은 '핵·미사일 고도화'가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바꾸고 제도화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규명하였다. 이에 본 연구가 한미 '참수작전' 고도화·훈련 시행 및 시현

과 장기적 국가전략·군 전략과의 정밀한 조합 필요성 측면 등에 있어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향후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실제적 대응능력, 미국 본토 2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경우 북한의 '참수작전' 대응태세 예측 및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 등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북한문헌

『조선중앙통신』.

『로동신문』.

『우리민족끼리』.

2. 국내문헌

가. 단행본

고재홍.『김정은 정권의 핵능력 고도화와 대남정책의 변화』. 서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권태영.『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서울: 북코리아, 2014.

Antulio Echevarria. 나종남 역.『군사전략 입문』. 서울: 황금알, 2018.

Andrew Futter. 고봉준 역.『핵무기의 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2016.

전봉근.『비핵화의 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2020.

한국 국방부.『2022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22.

_____.『2016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6.

_____.『2014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14.

나. 논문

강창부. “참수작전의 효과성에 관한 논쟁과 그 시사점.”『국가전략』. 제26권 3호, 2020, pp. 5-32.

구본윤, 박성호. “김정은 시기 핵전략의 이중성: 확증보복태세와 허세부리기.”『통일연구』. 제26권 제2호, 2022, pp. 178-188.

김동엽.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북한의 인식.”『현대북한연구』. 제19권 제2호, 2016, pp. 94-100.

김보미.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고도화의 원인과 한계: 북한의 수직적 핵확산과 정권안보.”『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2호, 2017, p. 33.

김태현. “북한의 핵 능력과 전략.”『넘어야할 벽, 이루어야 할 꿈: 남북관계의 새로운 도전과 통일 전략의 비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2024. 5. 3, pp. 11-38.

_____. “북한의 국경독재체제와 핵전략.”『국방정책연구』. 제33권 제3호, 2017, pp. 31-68.

김영준.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한국군 특수작전부대의 역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남성욱.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트럼프 미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와 전망.”『통일전략』, 제17집 제4호, 2017), pp. 55-110.

박영태. “평시 참수작전의 성공조건에 관한 연구.”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박창권, 권태영. “우리군의 비대칭전략: 대안과 선택방향.”『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제14권 제38호, 2007, pp. 81-118.

박휘락. “북한 핵위협 대응에 관한 한미연합군사력의 역할 분담.”『평화연구』. 제24권 제1호, 2016, pp. 81-116.

_____. “북핵 대응에 대한 한국의 비핵 플랜B 검토: 자체 억제 및 방어태세의

보완.”『한국의회발전연구회』. 제25권 제3호, 2019, pp. 70-96.

서동구. “북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딜레마.”『통일연구원』. 제23권 제2호, 2014, p. 88.

신인균. “북한 핵개발의 성격 규명과 군사적 대응의 적실성.”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양욱. “한국군의 대북참수작전 수행방안: 해외 참수작전 사례의 한반도 적용방안 연구.”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양욱. “참수작전의 유형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한국국가전략』. 제5권 제2호, 2020, pp. 183-215.

이승수. “북한 비대칭위협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이일우. “김정은 시기 북한 군사력 증강 분석과 한국의 대응 전략.”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이호령. “북한 핵 무력 증강과 무력 통일 노선.”『개원 33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 북한의 두 국가론과 민족 분리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2024. 4. 1., pp. 25-45.

인주영. “북한의 비대칭 군사전략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漢城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2015.

정방호.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 강압외교’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2.

정성윤. “북한 4차 핵실험의 의미와 파장.”『통일연구원 온라인시리즈』. 제16집 제2호, 2016, p. 3.

최재경. “북한의 비대칭 전략 위협과 한국군 대응 방향에 대한 연구: 북한군 비대칭 4대 위협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탁경훈. “북한의 비대칭전략에 따른 안보위협과 대응방안.” 湖南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12.

한용섭. “기획논문: 이라크 전쟁과 한반도 안보;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군사전략

의 변화: 평가와 전망.”『국방연구』. 제46권 제2호, 2003, p. 10.
황원준.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표적사살의 정당성.”『한국군사학논집』. 제79권 제2호, 2023, pp. 203-228.
황일도. “북한의 장기 핵 전력구조 전망: 이론적 해석 및 선행사례.”『정책연구시리즈』 제5권, 2023, pp. 1-69.

다. 인터넷

『연합뉴스』.
『KBS』.
『뉴시스』.
『조선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아시아경제』.
『서울경제』.
『연합뉴스TV』.
『국방일보』.
『동아일보』.
『노컷뉴스』.
『문화일보』.
『YTN』.
『뉴스1』.
『아주경제』.
『VOA』.
『RFA』.

3. 외국문헌

가. 단행본

Michael Freeman. *The Headless Horseman: A Theoretical and Strategic Assessment of Leadership Targeting.* California: Naval Postgraduate School, 2010.

Robert Pape. *Bombing To Win; Air Power and Coersion in War.*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6.

John Warden. *The Air Campaign : Planing for Combat.* Washington: NDU Press, 1989.

John Warden. Air Theor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Battlefield of the Future.* Alabama: Air University Press, 1995, p. 108.

Vipin Narang. *Nuclear Strategy in The Modern Era: Regional Powers and International Conflic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4.

나. 논문

Bryan Price. "Targeting top terrorists: How leadership decapitation contributes to counterterrorism." *International Security.* Vol.36, No.4, 2012.

Stephanie Carvin. "The Trouble with Targeted Killing." *Security Studies.* Vol.21, No.3, 2012.

Audrey Cronin. "How Al-Qaida Ends: The Decline and Demise of Terrorist Groups." *International Security.* Vol.31, No.1, 2006.

Jenna Jordan. "Attacking the leader, missing the mark: Why terrorist groups

survive decapitation strikes." *International Security.* Vol.38, No.4, 2014.

Patrick Johnston. "Does decapitation work?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leadership targeting in counterinsurgency campaigns." *International Security.* Vol.36, No.4, 2012.

Robert Pape. "The Strategic Logic of Suicide Terrorism." *American Political Scienc Review.* Vol.97, No.3, 2003.

<부 록>

2016년~2017년, 한미 '참수작전'에 대한 북한의 언급

조선중앙통신 기사	강조	관련 언급
2016년 2월 23일 군 최고사령부 중대성명	선제 공격	"이른바 참수작전과 족집게식 타격에 투입되는 적들의 특수작전무력과 작전장비들이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보이는 경우 그를 사전에 철저히 제압하기 위한 선제적인 정의의 작전수행에 진입할 것"
	억제·보복	"우리에게는 미국 땅덩어리를 마음 먹은대로 두들겨팰 수 있는 강위력한 최첨단공격수단들이 다 있다." "보복타격의 격발기는 이미 당겨놓은 상태"
2016년 3월 4일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구경방사포 시험사격을 지도》	선제 공격	"《참수작전》과 《체제붕괴》와 같은 마지막도박에 매달리고있는 것으로 하여 정세는 더이상 수수방관할 수 없는 험악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적들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대응방식을 선제공격적인 방식으로 모두 전환시킬 것"
2016년 3월 7일 국방위 성명 《조선 국방위원회 무모한 침략전쟁의 총포성을 도발자들의 참혹한 장송곡으로 만들어놓을것이라고 경고》	억제·보복	"적들이 감히 우리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복》을 노린 《참수작전》을 떠들며 사소한 군사적망동이라도 부린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의의 통일성전으로 우리 민족의 최대숙원을 성취할 것"
2016년 3월 12일 북한군 참모부성명	억제·보복	"족집게식타격 전술에는 우리 식의 전격적인 초정밀기습타격으로 대응할 것"
2016년 3월 16일 《정부,정당,단체 특별성명》	핵선제 공격	"국법에는 나라의 최고존엄이 위협당하는 경우...핵타격수단들을 포함한 모든 타격수단들을 총동원하여 선제소멸하게 규제되여있다."
	선제 공격	"적들이 특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즉시적인 선제타격전에 돌입할 것"

2016년 9월 22일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억제·보복	“박근혜패당이 떠드는 《북수뇌부제거》 망동은 청와대의 완전궤멸과 서울재더미만을 초래케 할 것” “징벌의 핵탄은 청와대와 반동통치기관들이 몰려있는 동족대결의 아성 서울을 완전재더미로 만들어버릴 것”
2016년 11월 4일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를 시찰하시였다》	억제·보복	“청와대와 괴뢰정부, 군부요직에 틀고앉아 천추에 용서못할 만고대역죄를 저지르고있는 인간추물들을 제거해버리는것을 기본전투임무로” “명령만 내리신다면...무엄하게도 북수뇌부직접공격, 참수작전, 평양초토화를 떠벌이는 불구대천의 원수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모조리 쓸어버리고”
2016년 11월 21일 《외무성 비망록》	억제·보복	“참수작전과 족집게식 타격까지 운운하며 무모한 군사적도발소동에 매여달리는데 대처하여 우리는 소형화된 핵탄두를 전격 공개하고...막강한 핵공격능력을 과시”
2017년 3월 26일 《총참모부 대변인 경고》	선제공격	“우리의 최고존엄을 노린 미제와 괴뢰군부호전광들의 특수작전흉계가 명백해지고 위험천만한 선제타격 기도까지 드러난 이상 우리 식의 선제적인 특수작전, 우리 식의 선제타격전으로 그 모든 책동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
2017년 3월 2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	선제공격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주요전략기지들을 특수작전으로 제거하겠다고 선포한이상 우리가 선제타격으로 대응하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자위권의 행사”
2017년 5월 5일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	억제·보복	“최고존엄을 노린 미중앙정보국과 괴뢰국정원의 테로광신자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찾아내여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릴 것”
2017년 8월 9일 《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억제·보복	“감히 우리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을 획책하고있는 미국의 도발에 대해서는 그 사소한 움직임이라도 포착되는 즉시...우리 식의 선제적인 보복작전이 개시” “무모한 음모실현을 위해 움쩍하기만 하면...우리 식의 선제적인 정의의 보복작전에 진입할 것”
2017년 10월 19일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대변인 담화》	선제공격	“싸이버전과 배합된 참수작전 강행기도가 포착되면 그 즉시 우리 식의 무자비한 선제타격전이 개시”

2017년 10월 27일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대변인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서는자들은 죽음과 멸망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강조》	억제·보복	“최고존엄에 감히 도전해나서는자들은 지구상 그 어디에 있든 천길 땅속을 뒤져서라도 마지막 한놈까지 철저히 징벌”

ABSTRACT

A study on North Korea's response to the ROK-US 'decapitation operation' during the Kim Jong-Un era

Han, Do Hyung
University of North Korean Studies
Directed by Prof. Kim, Dong-Yub

This study focused on the fact that,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decapitation operation' in military strategy, there has been no systematic study of North Korea's response to the ROK-US 'decapitation operation'. This study sought to analyze when and how North Korea's response to the 'decapitation operation' changed, and what was behind that change.

In June 2015, 'Operation Plan 5015', which included the ROK-US 'decapitation operation', came into effect, and in August 2015, there was an official mention of the 'decapitation operation' by a Korean military official. However, North Korea's initial response to the ROK-US 'decapitation operation' was a 'defensive response', emphasizing the common values of the North and South, such as 'Han race', 'Unification', and providing moral criticism and demanding dialogue and cooperation rather than mentioning the possibility of a military response. This was an inertial response that did not deviate from the position of possessing nuclear weapons for deterrence and retaliation as stated in the 'Nuclear Possession Act' enacted in February

2013. During this period, North Korea's missile launches were mainly limited to short-range missile launches, and North Korea focused on improving the combat capabilities of existing weapon systems.

The following year, North Korea shifted to an 'offensive response' to the ROK-US 'decapitation operation'. In February 2016, North Korea first raised the position that it could respond to a 'decapitation operation' with a preemptive strike in the "Important Statement of the Supreme Command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n in a statement from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on March 7, it said it could respond with a "nuclear preemptive strike." The period when North Korea switched to an 'offensive response' coincided with the period when it began to accelerate the advancement of its nuclear and missile systems. North Korea conducted its fourth nuclear test on January 6, 2016, and its fifth nuclear test on September 9 of the same year. The following year, in September 2017, the sixth nuclear test was conducted. The period between 2016 and 2017 was the only time that North Korea conducted three nuclear tests in two years. North Korea has also shown rapid progress in its missile capabilities, including successfully launching an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 with a range that can strike the U.S. mainland.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accelerated the advancement of it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gives partial, but not complete, credibility to its shift to an 'offensive' response to the ROK-US 'decapitation operation'.

After the inauguration of the Biden U.S. government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f Yoon Seok-yeol, North Korea has adopted the 'nuclear force policy' law in September 2022, in a situation where the

ROK-US 'decapitation operation' capacity building and demonstration resumed through ROK-US joint exercises, etc. A year later, in September 2023, the Nuclear Forces Policy Act was specified in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advancing to the highest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that can be implemented. The claim, contained in the March 2016 Joint Statement of Government, Political Parties, and Organizations, that when North Korea's 'supreme dignity' is threatened, national law stipulates preemptive destruction by mobilizing all means, including nuclear weapons, has come true about six years later. Behind the long period of time was the advance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When North Korea institutionalized its 'offensive' response, it began to intensively express its position that it was targeting South Korea as a military target by conducting various tactical nuclear strike exercises. North Korea believed that it could successfully carry out 'nuclear hostage' against South Korea, and the background to such judgment was the progress made in the advancement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It can be said that one of the many goals of 'taking Koreans nuclear hostage' pursued by North Korea includes the deterrent nature of the ROK-US 'decapitation operation' and 'operation to eliminate Kim Jong-Un.'

Key words

North Korea, Kim Jong-Un, Operation Plan 5015, decapitation operation, preemptive strike, Nuclear Forces Policy Act, Nuclear hostage